
2023년 인천도시공사 종합감사 결과

2023. 11.



[감 사 관]

2023년도 인천도시공사 종합감사 결과

1. 감사실시 개요

- 감사기간: 2023. 9.11. ~ 9.22.(10일간) *사전조사: 2023. 8.28.~9. 1.(5일간)
- 감사범위: 2020. 6월부터 추진한 업무 전반
- 감사반: 2개 반 11명
- 감사중점
 - 경영정상화를 위한 재정운영 건전화 및 방만경영 개선사항
 - 주요 개발사업 추진의 적정성 및 부진사업의 문제점
 - 조직 및 인력운영 등 업무취약분야 집중점검
 - 분양·임대 및 수입금 관리사업의 적정성
 - 기계, 설비 및 건축시설물 등 안전관리 및 점검실태
 - 사업추진에 있어서 법령 및 내부규정 위반사항 등

2. 감사결과

○ 처분요구 총괄

(단위: 건, 천원, 건/명)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기관 경고
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 통보	계	회수	감액	계	징계	경고	훈계	
40	13	20	7	896,533	2,380	894,153	8	2	2	4	4

○ 처분요구 내역

(단위: 건, 천원, 건/명)

연번	분 야	지 적 사 항	관 련 부 서	처 분 내 역				비고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기관	
1	조 직	자산관리회사(AMC) 조직관리 부적정	○ 실	권고				
2	회 계	회계서류 지출증빙 및 보존 부적정	◎ 처	시정			기관 경고	
3	계 약	공모사업 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부적정	◇ 처	시정				
4	예 산	노트북, 태블릿PC 구매 및 관리 부적정	□ 처	개선				
5	조직·인사	조직개편 절차 및 ㉠장 직책보임자 임용 부적정	○ 실 □ 처	시정 주의		훈계1	기관 경고	
6	복 무	병가 관리 및 사용 부적정	□ 처	시정				
7	총 무	비상근무에 따른 보상휴가 시행 및 수당 지급 근거 미흡	□ 처 △ 실	통보				
8	총 무	공사 창립기념일 유급 휴가일 운영 부적정	□ 처	통보				
9	임 대	임대료 장기 체납세대 관리 부적정	▽ 처	시정		훈계2		
10	주거복지	대행사업비 정산 부적정	◁ 센터	시정		징계2		
11	재 산	재산 사용허가 및 재산관리규정 운영 소홀	● 센터	시정 개선				
12	임 대	공공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 관리 업무 소홀	▽ 처	주의				
13	계 약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미이행	◎ 처	주의				
14	계 약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부적정	◆ 사업단	주의		훈계1 경고2		
15	회 계	평가급 지급 부적정	□ 처	주의			기관 경고	
16	계 약	공사용자재 우선구매 검토 소홀	◎ 처	주의				
17	계 약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관리 소홀	◆ 사업단 외 4처	주의				
18	계 약	용역 발주 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적정	○ 실, ◎ 처, ▽ 처, ◆ 사업단, ■ 처	주의				

연번	분 야	지 적 사 항	관 련 부 서	처 분 내 역				비고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기관	
19	계 약	용역계약 지연배상금 부과 소홀	◎ 처	시정 주의				
20	건 설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 공정관리 등 감독 소홀	● 처				기관 경고	
21	건 설	사업예산의 편성 및 집행 관리 소홀	◆ 사업단, ▣ 처	주의				
22	건 설	설계변경의 기술검토팀(T/F팀) 구성·운영 소홀	目 부	개선				
23	건 축	건축 설계용역(공모) 저작권 귀속업무 소홀	◇ 처, ▨ 처	시정				
24	건 축	연간 임대계획 및 영구임대주택 관리계획 수립 소홀	▽ 처	주의				
25	건 축	영구임대주택 및 행복주택 실태조사 소홀	▽ 처	주의				
26	건 설	완료사업 하자검사 시행 소홀	◎ 센터, ◆ 사업단	주의				
27	건 설	건설공사(택지조성, 도시시설물) 공사물량 중복 검토 소홀	◆ 사업단	시정 주의	감액 513,338	-	-	
28	건 설	가설건축물 등 공사비 과다 계상	◆ 사업단, ▣ 처	시정 주의	감액 381,115	-	-	
29	공 사	발주자의 적정 공사 기간 입찰공고 안내 등 소홀	◎ 처	주의				
30	공 사	□□□□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 (**공구) 감독 소홀	● 처	개선				
31	공 사	△△△△ 조성사업 근린공원 제**호 우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공사감독 소홀	▣ 처	시정 주의	회수 599			
32	공 사	조경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처리 부적정	● 처	시정	회수 1,781			
33	안 전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 체결시기 미준수	● 처	주의				
34	안 전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지침 미준수	▨ 처	주의				
35	안 전	건설공사 안전관리 규정 미준수	◇ 처, ● 처 ◆ 사업단	주의				

3. 처분요구서

※ 명세 별첨

인 천 광 역 시

권 고

제 목 자산관리회사(AMC) 조직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인천도시공사

관 계 부 서 ○실

내 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에 자산관리회사(AMC¹⁾)란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위탁받은 자산의 투자·운용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를 말하며 같은 법 제22조의3(자산관리회사의 인가 등) 3항에 의거 자산관리회사는 위탁받은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영(兼營)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조항의 단서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아 할 수 있는 자로서 투자자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겸영(兼營)이 가능²⁾하다.

이에 인천도시공사는 자산관리회사의 업무를 운영(겸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

1) Asset Management Company, AMC

2) 제22조의3(자산관리회사의 인가 등) ③ 자산관리회사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영(兼營)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8. 20.>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된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제21조제1항 각 호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할 수 있는 자로서 투자자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경우

3. 위탁받은 자산의 투자·운용과 투자자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로부터 20**. *. *. 지방공기업에서는 최초로 자산관리회사 인가를 받았으며 현재 [표]와 같이 *개 부동산투자회사(리츠)로부터 위탁받아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인천도시공사의 자산관리회사 업무수탁 현황 : 생략

인천도시공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3 제3항에 따라 20**. *. *. 자산관리회사 인가를 국토교통부에 신청하며 같은 규정에서 정한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자산관리회사 조직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이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관리를 전담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으로 ‘AMC 사업단’을 공공정책사업본부에 조직단위로 ‘처’에 해당하는 조직으로 신설하기로 계획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산관리회사 인가를 받았다.

또한, 인천도시공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7조(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등)에 따라 위탁받은 자산의 투자와 운영에서 건전한 자산운영을 도모하고 고객³⁾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20**. *. *. 「자산관리회사 내부통제기준」의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같은 규정 제5조(조직구조)에 자산관리회사의 조직은 본부내 하부조직으로 구성하며 공사와 회사 간 자산관리업무와 이행상충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운영업무, 회사의 고유자산 운용업무가 동일한 부서내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아울러, 인천도시공사의 조직은 「직제규정」에 따라 각 본부와 하부조직으로

3) 인천도시공사 「자산관리회사 내부통제기준」 제2조(정의)

6. “고객”이란

가. 부동산투자회사

나. 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하려는 투자자 및 주주

다. 투자를 하려는 의향자

라. 가목 및 나목의 임직원

소, 실, 단, 처 등을 두어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인천도시공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인가된 자산관리회사(AMC)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인가신청한 계획과 인천도시공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독립적인 조직인 ‘처’ 단위의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천도시공사에서는 감사일 현재 자산관리회사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그림]와 같이 ‘AMC사업단’내 ‘AMC사업부’로 운영하고 있으며 AMC사업단은 AMC사업부, 금융사업1부, 금융사업2부로 구성되어 있어 AMC사업단의 분장업무는 자산관리회사 업무이외에 리츠 투자유치, SPC 출자 및 관리, 리츠 주주관리 등의 업무를 함께 분장하고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운영계획 및 인천도시공사의 내부통제기준의 규정과 달리 자산관리회사 업무를 독립적 조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

【그림】 인천도시공사 AMC사업단 조직구성 및 분장사무 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권고】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인천도시공사의 규정 「자산관리회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자산관리업무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직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기관경고·시정요구

제 목 회계서류 지출증빙 및 보존 부적정

기 관 명 인천도시공사

관 계 부 서 ◎처

내 용

인천도시공사는 「회계규정」 제2조(적용범위)에 따라 「지방재정법」 등 예산회계 관련법령 및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지방회계법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98조(증거서류의 원본주의 등) 및 「감사원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계산증명규칙」 제8조(증거서류의 원본주의)에 의거 지출결의서 등에 붙이는 증거서류는 원본에 한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감사원 「계산증명규칙」 제12조(증거서류의 편철) 및 인천도시공사 「회계규정」 제11조(회계서류의 보관 등)에 의거 지출에 관한 회계증빙서류는 일자별, 회계전표순으로 편철하도록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다.

아울러 지출계산서에 붙이는 서류는 감사원 「계산증명규칙」 제26조(지출계산서의 붙임서류) 및 제27조(지출계산서의 증거서류), 제29조(증거서류의 붙임서

4) 「지방재정법」에서 회계관련 부분 분리 제정(2016.5.29.)

류)에 따라 지출결의서, 영수증서, 견적서, 청구서, 계약서, 각종조서, 계약관련서류, 공고안, 예정가격조서, 입찰서, 도면, 기타 지출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 등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천도시공사는 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지출과 관련하여 지출결의서에 지출서류, 지출증거서류, 붙임서류 등을 원본으로 또는 원본이 아닌 경우 원본대조필하여 일자순, 회계전표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간은 인천도시공사 「사무관리규정」 제27조 및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37조제6항에 의거 출납서류는 10년을 보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천도시공사는 지출에 증빙이 되는 서류를 지출결의서와 함께 편철하여 보관하지 않고 있다.

인천도시공사에서는 지출 증빙서류중 계약관련서류는 ○부(팀), 지출관련 종이 계산서 등은 ◎부(팀), 기타서류는 원인행위부서에서 개별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각 개별부서에서 보관하고 있는 관련서류가 지출의 증빙서류로 보관하고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그 절차나 보관서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내부규정이나 방침 등이 없어 지출의 증빙서류로 보관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지출결의서별로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있는 사실도 회계법령 및 내부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인천도시공사는 지출증빙과 관련하여 회계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을 위반하여 관리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기관경고] 관련법령 및 내부규정을 위반한 지출증빙서류 부당 관리에 대하여 기관 차원의 주의가 필요하여 경고하오니,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지출증빙서류 관리를 법령 및 내규에 따라 관리하시기 바라며,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공모사업 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부적정

기 관 명 인천도시공사

관 계 부 서 ◇처

내 용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국토교통부훈령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제7조에 따라 공공시행자는 사업계획서 등을 투명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평가위원은 토지이용·도시·교통·환경·금융·주택·건설 등 분야별 관계전문가와 공공시행자 임직원 및 관계공무원으로 균형있게 20인 내외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민간전문가중에서 호선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특별설계 택지공급은 국토교통부훈령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토록 정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외부위원을 50%이상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20**년 ●● ○○BL 장기공공임대 및 소규모 공공임대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20**년 □□신도시 ◎◎BL 민간참여 공동주택건설사업을 공모하였으며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특별설계 택지공급으로 20**년 □□신도시 공동주택용지(●●,◆◆,■) 특별설계 공급을 공모사업으로 [표1]과 같이 시행하였다.

【표1】 인천도시공사 ●● ○○BL외 2개사업 공모사업 현황 : 생략

인천도시공사에서는 ●● ○○BL, □□ ◎◎BL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분야별 관계전문가 50%, 인천도시공사 및 관계공무원 50%로 균형있게 선정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호선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천도시공사는 중요사업의 평가시 임직원의 참여를 높이도록 한 인천도시공사의 (전)사장의 지시에 따라 [표2], [표3]과 같이 관계공무원은 배제하고 인천도시공사 임직원으로만 위원을 50% 선정하여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은 민간위원중 호선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별도로 인천도시공사의 사업담당본부장으로 지정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다.

【표2】 ●● ○○BL 및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20**.**.*) : 생략

【표3】 □□ ◎◎BL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20**.**.*) : 생략

그리고 인천도시공사에서는 □□ ●●BL, ◆◆BL, ■■BL의 특별설계 택지공급을 위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외부위원을 50%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천도시공사는 [표4]와 같이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위원장을

공사의 본부장을 별도로 지정하여 외부위원의 선정비율이 50% 미만으로 운영되도록 구성하였다. 비록 위원장은 심의권을 부여하지 않았으나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으로 위원회 구성기준을 위반하였다.

【표4】 □□ ●●,◆◆,■ ■BL 특별설계공모(20**.**.**) : 생략

조치할 사항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시정]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의 평가위원회 및 특별설계 택지공급을 위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리하시기 바라며,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개 선 요 구

제 목 노트북, 태블릿PC 구매 및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인천도시공사

관 계 부 서 □처

내 용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의 원칙으로 재정건전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지출경비를 산정하고 지출예산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에 필요한 최소경비만 예산에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코로나19로 재택근무 등 비상상황에 활용할 업무용 노트북을 [표1]과 같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08대(388백만원)를 구매하였으며 그중 183대는 4급이상 직원에게 개인별로 배부하였다.

【표1】 인천도시공사 업무용노트북 구매 현황 : 생략

인천도시공사는 2020년에는 코로나19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25대를 구매하였으나 이후 재택근무, 비대면회의 등이 증가하였으나 내부망으로는 보안정책으로 비대면회의 등을 수행할 수 없어 2021년 보직자에 대하여 노트북을 배부하기로

정하고⁵⁾ 80대를 구매하였다.

이후 인천도시공사는 노트북 관리방안⁶⁾을 수립하면서 연차적으로 전직원을 대상으로 노트북을 배부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여 2022년에는 4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 전원 배부하고자 2022년에 노트북 103대를 추가 구매하였다.

인천도시공사의 정원 및 현원대비 업무용컴퓨터 및 노트북 현황은 [표2]와 같이 현원은 393명이며 업무용컴퓨터는 447대로 전원에게 배부되어 있음에도 추가로 노트북을 전 직원에게 배부하고자 계획하였으며 4급이상 개인별 배부를 목표로 2022년까지 노트북을 구매하여 총234대의 노트북을 보유하고 있다.

【표2】 인천도시공사 정현원 대비 PC·노트북 현황 : 생략

인천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의 원칙에 따라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에 필요한 최소경비로 운영하여야 함에도 개인별로 업무용PC가 배부되었음에도 추가로 전 직원에게 개인별로 노트북을 배부하기로 하였으며 현재 현원 393명중 183명에게 노트북이 배부되었다.

또한, 인천도시공사는 2020년 차세대정보시스템 구축 용역(7,946백만원)을 시행하면서 차세대정보시스템의 과업중 모바일 현장업무 지원시스템 구축과제를 추진하여 모바일시스템(328백만원)과 태블릿컴퓨터 100대(66백만원)를 2021. 10월 납품받았다.

그러나 인천도시공사의 현장업무 지원용 태블릿컴퓨터 활용은 2021년 10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접속횟수는 472회로 해당 연간 2.4회로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5) 업무용 전자기기 운영 개선방안(○처-**, 20**.*.*)

6) 노트북컴퓨터 관리방안(□처-**, 20**.*.*)

인천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의 원칙에 따라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사업을 기획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로 계획하고 집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개선] ① 재택근무, 비대면회의 등을 위하여 구매하여 개인별로 배부한 노트북을 조직내 공용노트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사업추진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합리적 기준 마련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② 현장업무 지원용 태블릿컴퓨터의 사용을 제고를 위한 활용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기관경고·훈계·시정·주의 요구

제 목 조직개편 절차 및 ☒소장 직책보임자 임용 부적정

기 관 명 인천도시공사

관 계 부 서 ○실, □처

훈계대상자 □처

●●●급

C

내 용

인천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기반 구축을 위한 효율적 조직정비를 위해 2022.1.13. [표 1, 2]과 같이 조직개편(안)을 수립하여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으며,

처급 조직으로 신설되는 자체 연구조직인 ☒소⁷⁾의 부서장(정원: 관리2급) 직책보임자를 2022.1.4.~2022.1.24. 사내공모를 통해 ■■4급 D로 결정하여 2022.1.28. ☒장에 인사발령하였고 현재까지 보임 중에 있다.

【표1】 공사 조직개편(안) : 생략

【표2】 공사 조직개편 및 ☒소장 직책보임자 임용 추진 현황 : 생략

7) ☒소 정원(처급 조직) : 3명(관리2급 1, 사무·기술 4급 1, 5급 1)

1. 조직개편에 따른 정관 및 사규 개정 절차 이행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공사 정관 및 사규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사무전결 처리내규」 및 「경영회의 운영내규」에 따라 제·개정 방침 결재를 득한 후 공사 경영회의, 사규심의위원회, 부패영향평가, 이사회 의결 등 절차를 통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공사는 조직개편에 따른 정관 및 사규 개정시에는 「사무전결 처리내규」 제4조 및 제5조 [별표]⁸⁾에 따라 사장의 방침 결재를 득한 후, 공사 「경영회의 운영내규」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경영회의⁹⁾에서 이사회 부의안을 심의하여야 하며,

경영회의 부의안은 같은 규정 제5조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입안하여 업무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친 후 소관 실장·본부장의 결재를 받아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경영회의를 거친 이사회 부의안은 공사 「사규관리규정」 제12조에 따라 사규 입안 소관부서장이 사규 입안예고제 시행내규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입안예고를 하여야 한다.

같은 규정 제12조의3에 따라 입안예고를 거친 사규안은 그 소관 본부장의 결재를 받아 결재문서, 사규안,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사규심의위원회 회의 개최일 14일 전까지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주관부서장은 사규안의 체계·형식 및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안이나 의견을 붙여 사규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하고 그 심의결과를 소관부서장에게 지체없이 회송하여야 한다.

8) 「사무전결 처리내규」에 따라 정관 개정, 직제 개정 및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은 사장의 결재사항

9) 공사경영에 관하여 중요한 경영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사전심의체로 회의는 사장과 본부장으로 구성하여 이사회 부의대상, 경영기본방침, 사업추진 기본방향 등 정책결정사항 등을 심의

또한, 같은 규정 제13조의2에 따라 사규안을 입안한 소관부서는 해당 사규안에 대하여 부패영향평가부서에 부패영향평가를 의뢰하여야 하고 부패영향평가부서는 사규안을 검토하여 결과통보서를 사규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소관부서는 같은 규정 제14조에 따라 통보된 사규안을 이사회운영규정에서 정한 절차¹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정관, 직제규정과 같이 중요한 규정의 경우 제15조에 따라 이사회회의 의결로써 확정된다. 사규안이 확정된 후 조례 및 정관에 따라 인천광역시장 또는 관계 기관의 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절차를 이행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16조에 따라 주관부서장은 확정된 사규에 공포번호를 부여하고 「사무전결 처리내규」에 따른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공포하여야 한다.

나. 관계사실

공사에서는 조직개편을 추진함에 있어 공사 정관상 중요한 규정에 해당하는 정관 개정, 직제 개정 및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조직개편(안)에 대한 「사무전결 처리내규」에 따른 사장의 결재문서로서의 방침 수립 및 경영회의¹¹⁾ 사전심의 없이 2022.1.4. 제250회 이사회 개최 방침(○실-**호, 실장 결재)을 수립해 조직개편 관련 규정 부의안 2건¹²⁾(이하 ‘조직개편 관련 규정’라 한다)을 첨부하여 이사회에 부의하였고, 사규안을 개정함에 있어 「사규관리규정」 제13조의2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의뢰하지 않았다.

10) 이사회운영규정 제10조제1항 :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입안하여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친 후 사장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문서를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회의개최 전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11) 공사경영에 관하여 중요한 경영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사전심의체로 이사회 부의대상은 경영회의 사전심의 필요

12) 인천도시공사 정관 일부개정(안),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이로 인해, 조직개편 관련 규정 개정에 대한 2022.1.6. 경영회의 심의 의결(원안가결), 2022.1.12. 이사회 심의 의결(원안가결)이 끝난 후에서야 2022.1.13. 조직개편 추진을 위한 중요 추진사항¹³⁾이 포함된 조직개편(안)(○실-**호, 사장 결재)을 수립하게 되는 등 정관 및 사규 개정 절차를 부적정하게 추진하였다.

2.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부서 최소인력 기준 위반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VI.조직 ① 합리적인 조직 및 인력배치

- 나. 인력배치 기준에 따르면 부서단위 인력산정은 기본인력(법정인력¹⁴⁾ 포함)에 사업(추가)인력¹⁵⁾을 합한 인력수로 산정하며, 기본인력은 부서 운영을 위한 최소인력으로 4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나. 관계사실

그러나, 공사는 조직개편에 따른 연구조직인 ☒소를 처급(부서급) 조직으로 신설함에 있어 정원 3명으로 부서 인력을 정함에 따라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의 부서 최소인력 기준에 위반되는 조직을 신설하였다.

다.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공사는 조직검토 단계에서는 부서 최소인력 기준을 적용하여 정원 5명을 배분하였으나 부서간 정원 협의과정에서 현장 등 사업부서의 정원 확대 배분을 위해

13) 조직개편(안) : 추진배경, 개편방향, 개편(안), 정원(직급별, 부서별) 조정(안), 조직별 업무분장(안), 행정 사항(이사회 개최, 입안예고 및 사규심의위원회 생략에 관한 사항, 조직개편 추진일정)

14) 법정인력 : 전기, 기계, 고압가스 등 필수자격증 소지자

15) 사업인력 : 사업량에 따라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 최소인력

서 신설 연구소 조직에는 최소 3명으로 정원 배분하였고, 신설 연구소 조직은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을 목표로 하여 단계별 조직을 확대¹⁶⁾하는 것으로 구상하였기 때문에 초기에는 현재 정원과 인력, 조직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최소 3명으로 정원 배분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서는 합리적인 조직과 인력배치를 위해 업무의 규모 및 소속인력 등을 고려하여 조직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단계별 연구조직 확대 구상은 중장기 계획으로 일반적인 조직개편 주기를 감안할 때 2024년까지 3년간 신설·운영할 1단계 연구조직을 부서단위 신설·운영을 위한 최소 인력 기준 4명에 미달되는 3명으로 처급 조직을 신설한 점을 고려하면 공사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장** 직책보임을 위한 직급 불일치자 임용 부적정

●●●급 C는 20**. *. *.부터 20**. *. *.까지 공사 □처에서 전보 및 인사발령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공사 「직제규정」 제11조에 따르면 처장은 1급부터 3급까지의 직원으로, 부장은 2급부터 4급까지의 직원으로 보하고, 「직제규정 시행내규」 제2조의3에 따르면 사장직속 하부조직으로 처·부를 둘 수 있다.

또한, 공사 「인사규정」 제3조 및 제5조에 따르면 ‘직급’은 직무의 종류 및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하며, ‘직위’는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하는

16) 1단계(‘22~’24) 연구조직 신설 → 2단계(‘25~’27) 조직확대 → 3단계(‘28)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공사 직원의 직종 중 ‘관리직’은 사무업무 및 기술업무를 관리하는 직원이고, 그 직종별 직급은 [표 3]와 같고 직위·직무특성을 감안한 신규채용시 직급별 임용자격 기준은 [표 4]과 같다.

【표3】 직종별 직급 : 생략

【표4】 직급별 채용기준(관리직, 사무직, 기술직) : 생략

공사는 직원의 인사에 대하여 공사 「인사규정」 제15조에 따라 직원의 보직은 각 부서별 정원을 초과하여 보직¹⁷⁾하지 아니하고, 제17조의3에 따라 직원 선호도가 높거나 영향력이 큰 직위 등을 사전에 지정하며, 당해 직위에 대한 사내공모 등을 실시하여 능력중심의 인사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공사의 장은 직원의 보직을 부여함에 있어 관련규정에서 직무의 종류 및 책임도에 따라 정하고 있는 해당 직위별 직급과 부서별 정원을 준수하여 직원의 전공, 학력, 자격, 근무경력, 전문성,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고, 사내공모를 통해 직책보임자를 결정할때는 인사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혀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책임자자 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관계사실

공사 **담당부서인 ○실에서는 2021.10.19. 인천광역시 ☐관에서 2021년도 인천도시공사 조직진단 결과 통보(☐관-**-호)¹⁸⁾에 따라 ♣실에서 수행중인 연구 TF에 대한 조직개편을 추진함에 있어,

17) 다만,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해 잠정적으로 정원을 초과하여 보직할 수 있다.

18) ♣실에서 수행중인 연구 TF 운영은 부적정, 연구 업무를 ○실로 이관 필요

연구조직인 ☒소 신설 조직개편(안)을 사장직속 처급 조직으로 신설하고 부서장 정원은 처장급인 2급으로 검토¹⁹⁾하여 2021.11.12. 공사 조직개편 초안 수립 보고, 2021.12.1. 조직개편(안) 인천광역시 ☒관 사전 협의, 2021.12.29. 「iH 연구조직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시행방안 연구」 결과 사장 보고(♣실 연구 TF) 후 조직개편 관련 규정 개정²⁰⁾ 및 2022.1.13. 조직개편(안)(○실-**, 사장 결재)을 수립하여 ☒소를 사장직속 처급 조직, 부서장 정원 2급으로 신설하였다.

그러나, **담당부서인 □처에서는 ○실에서 ☒소를 사장직속 처급 조직, 부서장 정원 2급으로 신설하는 점을 감안하여 前 사장의 지시에 따라 2022.1.4. 조직개편에 따른 ☒소 등 직책보임자 사내공모 계획(안)(□처-**, 사장 결재)을 수립하여 2022.1.5. ☒소장 지원자격을 처장급인 2~3급 이상 직원으로 전부서에 직책보임자 사내공모 안내(□처-**)하였으나,

2022.1.5. 사내공모 안내 직후 前 사장의 ☒소장 직책보임자 사내공모 자격 기준 직급 하향 변경 지시에 의해 2022.1.6. 직책보임자 사내공모 지원자격기준 변경(안)(□처-**, 사장 결재)을 수립해 ☒소장 지원자격을 부장급인 3~4급 이상 직원으로 변경 후 사내공모를 실시하여,

「직제규정」 및 「직제규정 시행내규」에 따른 ☒소 부서장 직급(관리2급)에 불일치되는 실무직원 직급에 준하는 ■■4급 D을 2022.1.24. 직책보임자로 결정하여 2022.1.28. ☒소장에 인사발령하였고 현재까지 보임 중에 있다.

① C의 경우

19) 공사 자체 연구부서 신설 및 운영방안(2018년, 인천연구원) 토대로 검토 : 사장 직속 독립기구, 센터장 2급 이상

20) 공사 정관 일부개정안,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 '22.1.12. 이사회 의결, '22.1.17. 시 승인, '22.1.20. 시행, 직제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 '22.1.28. 시행

●●●급 C는 20**. *. *.부터 20**. *. *.까지 공사 □처에서 전보 및 인사 발령 등 업무를 담당한 실무담당자로서 조직개편에 따른 처장급 신설 직위인 ▣소장 직책보임자 사내공모 및 인사발령을 진행함에 있어 관련규정상 실무직원 직급인 4급은 직책보임자로 인사발령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장의 지시²¹⁾에 따라 인사발령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실무직원에게 해당하는 ▣4급 D가 2022.1.28. ▣소장으로 인사발령되었고 현재까지 보임함에 따라 직급 불일치자 부서장 직위 부여, 해당 직위 정원 직급(관리2급)의 승진 기회 감소 등 공정한 인사원칙을 저해하고 조직내 직위, 직급별 권한의 불균형으로 조직운영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직책보임자 사내공모 과정에서 前 사장 등 상급자의 지시로 관련 규정을 위반하며 무리하게 추진된 사내공모 자격기준 변경은 특정인²²⁾ 직책보임자 공모를 위한 부당한 행위²³⁾로 판단된다.

다.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위 행위자는 조직개편에 따른 처장급 신설 직위인 ▣소장에 실무직원 직급인 4급 직원을 직책보임하는 것이 관련 규정에 위배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前 사장에 의한 거듭된 지시로 인해 이행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21) C는 20**. *. *. 실시한 문답조사에서 □처장 지시 직후 직제규정 시행내규상 사내공모 자격기준을 3~4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규정 위반으로 보고하였고, □처장이 前 사장에게 재보고 하였으나 □처장은 前 사장의 반복없는 지시로 인해 자격기준을 3~4급으로 변경토록 지시하였다고 진술함.

22) ▣4급 D : 당시 사장 직속 ♣실 내 연구 TF 소속 실무자(20**. *. *.~)

23) A는 20**. *. *. 실시한 문답조사에서 사내공모 당시 공사 내부인력 중 ▣소장(처장급 2~3급) 공모 가능 인력이 부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관련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인력배치를 위해서는 ① 외부공모 방식의 전문인력 부서장 공모, ② 사내공모 당시는 조직개편 전으로 ▣소를 처급이 아닌 부급 조직(부장급 3~4급)으로 신설하여 사내공모를 검토함이 타당

상급자의 지시로 인한 행위라 할지라도 관련 규정에 위배된다는 것을 명백히 인지하면서도 행한 행위는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전 직원에게 공지된 사내공모 자격기준을 관련규정을 위반하며 특정인 직책보임자 공모를 위해 변경 후 직급 불일치자를 부서장 직위에 보임한 행위는 공사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및 조직운영에 있어 야기되는 문제점²⁴⁾을 고려할 때 행위자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기관경고] ☒소장 직책보임을 위한 직급 불일치자 임용 부적정에 대하여 기관차원의 주의가 필요하여 경고하오니,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계] 위 대상자 C를 ‘훈계’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공사 「직제규정」에 맞게 ☒소 조직을 정비하시기 바라며,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조직개편시 관련 법령 및 내규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기하시기 바랍니다.

24) 직급 불일치 부서장 직위 보임에 따른 문제점 : 해당 직위 정원 직급(관리2급)의 승진 기회 감소(하위 직급 또한 승진요인 감소), 직원들의 사내공모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 저하, 직위 및 직급별 권한의 불균형으로 인한 조직내 갈등 초래, 실무직급(4급)의 처장급(2급) 직위 보임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시 인사규정 적용 어려움 등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병가 관리 및 사용 부적정

기 관 명 인천도시공사

관 계 부 서 □처

내 용

인천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취업규정」에 따라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 하거나,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임·직원에 대해 특별유급휴가인 병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사 「취업규정」 제24조(특별유급휴가)에 따라 직원의 병가는 유급휴가로 허가하고 있으며, 제26조(병가)에 따라 임·직원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 하거나, 그 직원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연누계 2월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고, 우선 연차를 활용하고 병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 할 경우 병가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가가 아닌 공공기관 등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특별유급휴가로서 병가 부여기준 및 휴가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사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나, 공사의 경우 병가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병가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목적 외 병가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상의 병가제도 운영 세부기준을 준

용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감염병에 걸려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승인하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하 ‘승인권자’라 한다)은 근무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연가사유의 고의적 병가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동일한 사유의 질병임을 검진하기 위한 병가신청시 승인권자가 결정하되 이후 진단서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병가의 기간은 승인권자가 해당 직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와 진단서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²⁵⁾하여 소속 직원의 병가사용이 질병의 치료와 감염위험의 차단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사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 감사 대상기간 중 사용한 병가현황을 확인한 결과 [표]와 같이 ○처 ●●4급 E 등 11명은 병가를 사용하면서 증빙이 불가능한 진단서를 첨부하거나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았고 부서장은 이들에 대한 병가 사용을 그대로 승인함으로써 소속 직원 복무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 병가 부적정 승인 및 사용 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시정] 증빙이 불가능한 부적정 사용 병가일수에 대해 연가 공제 등 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직원 업무연찬 등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25) 승인권자는 병가 기간과 관계없이 직무수행 가능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시 추가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인 천 광 역 시

통 보

제 목 비상근무에 따른 보상휴가 시행 및 수당 지급 근거 미흡

기 관 명 인천도시공사

관 계 부 서 □처, △실

내 용

인천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에 따른 재난·안전 관리 체계 구축 및 비상상황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재난사고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공사 「재난 및 안전관리 매뉴얼」을 수립하여 태풍, 호우 등 재난·안전 상황 대응을 위해 재해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기상특보 등 상황발생시 각 본부별 직원들로 편성된 재해종합상황실 상황근무 TF 및 각 사업장 별 상황근무자들이 비상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사 △실에서는 상황근무자들에게 비상근무에 따른 보상휴가 시행 및 비상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공사는 2012.7.17. 비상근무에 따른 보상휴가 실시 방법(▼처-**호)을 내부 방침으로 정하여 보상휴가를 실시하여 왔으나, △실에서 주 52시간 근무에 따른 시간외근무 보상 방법의 부적합과 타 공사와의 형평성 문제를 사유로 보상휴가 실시 방법을 변경 검토하여 2020.6.23. [표]의 비상근무에 따른 보상휴가 실시방법 변경(안)을 첨부하여 □처에 변경 검토요청을 하였고,

□처에서는 요청된 보상휴가 실시방법 변경(안) 검토결과, 일반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휴일 또는 휴가 중 근무시 공사 취업규정 제31조에 따라 대휴 제도를 따르고 있으며, 비상근무에 따른 평일 야간근무 및 휴일 근무는 기존에 수립한 방침(▼처-**, 2012.7.17.)에 따라 시간외근무 수당 인정과 대체휴무를 시행중에 있으나,

△실에서 검토 요청한 변경(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하기 어려우니 비상근무 업무를 주관하는 △실에서 타 공사 사례를 참고하여 보상휴가 또는 수당지급에 대한 변경 방침을 수립 후 협조요청 하라는 의견으로 회신하였고,

이에 △실에서는 2020.7.21. □처장의 협조 결재(△실-**)를 받아 [표]와 같이 비상근무에 따른 보상휴가 실시방법을 변경 시행하였다.

또한, △실에서는 “4시간 미만 비상근무 근로자에게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前 사장의 지시사항에 따라 2022.8.10. [표]와 같이 비상근무에 따른 보상휴가 실시방법을 재변경 시행하였다.

【표】 비상근무에 따른 공사 보상휴가 실시 방법 변경(안) : 생략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공사의 재해종합상황실 운영에 따른 근로시간 이외의 비상근무는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 야간근로는(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 추가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 초과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상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동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같음하여 보상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상휴가제는 휴가부여 방식²⁶⁾, 임금청구권²⁷⁾, 부여기준²⁸⁾ 등 보상휴가제 도입에 필요한 노·사간 협의 및 서면 합의에 따라 시행 운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사는 보상휴가제를 시행함에 있어 노·사간 서면 합의없이 시행 중에 있으며, 보상휴가 부여 기간 산정시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같음하여 휴가로 주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은 채 자체 방침 수립을 통해 부여 기준(비상근무 4시간 이상 : 익일 1일 보상휴가, 비상근무 4시간 미만 : 익일 1/2일 보상휴가)을 임의로 정하여 운영 중에 있다.

△실에서는 2020.7.21. 비상근무에 따른 보상휴가 실시방법 변경 시행 방침(△실-1861) 수립시 공사 「건설공사안전관리규정」 제11조(지원)를 근거로 비상근무에 따른 비상근무수당을 △실 예산으로 편성(편성목 : 복리후생비)하여 기상특보 등 발효시 재해종합상황실 상황근무자²⁹⁾들에게 비상근무에 따른 비상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건설공사안전관리규정」 제11조(지원)는 공사가 관리 운영하는 공사현장 등의 안전관리, 안전시공 대책 등 공사현장별 안전점검반 운영에 따른 점검반원의 활동 지원을 위한 규정으로 재해종합상황실 상황근무자에 대한 비상근무수당의 지급근거로 볼 수 없다.

아울러, 공사 「사규관리규정」 제3조에 따르면 공사의 업무운영에 준거할 제반기준과 절차는 사규로 정하여 업무집행의 적정 및 통일을 기하도록 하

26) 보상휴가제를 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희망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할 것인지

27) 휴가청구권과 임금청구권을 선택적으로 인정할 것인지, 임금청구권을 배제하고 휴가청구권만 인정할 것인지

28) 보상휴가 대상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포함한 전체 임금으로 할 것인지, 가산임금만을 할 것인지

29) 재해종합상황실 상황근무 TF(각 본부별 직원들로 편성) 및 각 사업장 별 상황근무자

고 있고, 같은 규정 제4조의2(중요한 규정)에서는 보수규정, 복리후생규정, 취업규정 등 공사 직원의 봉급 및 제수당, 복리후생비 등 성격의 규정은 중요한 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인천도시공사 정관」 제25조(의결사항)에 따르면 중요한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볼 때 공사에서 직원의 비상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공사사규로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급금액,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실에서는 공사 직원의 비상근무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명확한 지급근거 없이 자체 방침 수립을 통해 임의로 지급기준(비상근무 4시간 이상 : 3만원, 비상근무 4시간 미만 : 2만원)을 정하여 지급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통보] 사규 제·개정 등을 통한 비상근무수당 지급 근거 및 노·사간 협의를 통한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보상휴가제 시행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통 보

제 목 공사 창립기념일 유급 휴가일 운영 부적정

기 관 명 인천도시공사

관 계 부 서 □처

내 용

인천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취업규정」 제21조, 「단체협약」 제68조에 따라 매년 5.24. 공사 창립기념일을 유급 휴일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지방공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 유급휴가(경조사 휴가, 출산휴가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에 해당하는 항목은 제외) 외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휴가를 운영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VI.조직 ⑤ 상생차원의 신노사문화 정착 - 나. 임금·단체협상에서 정부정책의 적극 준수에 따르면 법령·정부정책에 위반되는 임금·단체협상 체결 공기업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사장평가 반영 등 불이익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공사는 인천광역시 감사관으로 부터 「2018년 인천도시공사 종합감사

결과」에서 공사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에서 제외하도록 「취업규정」 등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공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 유급휴가 외의 이와 유사한 형태의 유급휴일을 운영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공사는 공사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있으나 노·사간 협의 어려움을 사유로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유지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통보] 공사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에서 제외하도록 「취업규정」을 조속히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훈계 · 시정 요구

제 목 임대료 장기 체납세대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인천도시공사

관 계 부 서 ▽처

훈계대상자	▽처	○○○○급	F
	▽처(現 ■■■)	○○○○급	G

내 용

인천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처에서는 [표1]의 공공임대주택³⁰⁾ 총 13,291세대 중 공가세대 총 1,290세대를 제외한 입주세대 총 12,001세대에 대해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2 등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등에 따라 매월 수납하는 임대료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표1】 인천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현황 : 생략

「주거급여법」 제2조에 따르면 보장기관은 주거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며, 같은 법 제6조에 따르면 주거급여³¹⁾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장과 군수·구청장이 실시한다.

30)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31)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함

또한, 같은 법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르면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그 다음 달에 속하는 주거급여일부터 주거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르면 수급자가 연체된 월차임 중 주거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합의를 하고 임대인이 월차임을 직접 수령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12조에 따라 임대인이 월차임 직접수령 신청서를 제출하고 급여를 임대인의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르면 수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이 임대하는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공사에서는 임대주택의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 중 주거급여 수급자를 확인하여 해당 보장기관에 통보하고, 보장기관에서는 수급자에게 주거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통보하여 수급자가 임차료를 직접 수령하지 않고 임차료가 공사의 계좌로 입금되도록 함으로써 주거급여를 수급하고도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는 입주자의 임차료 체납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사에서는 감사기간인 2023. 9월까지 임대주택 입주세대 중 주거급여 수급세대의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으며, [표2]의 임차료 3개월 이상 장기체납세대 중 주거급여 수급 총 64세대에 대해 해당 보장기관인 군·구에 주거급여 임차료의 연체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공사에서는 4개월부터 최장 31개월까지의 주거급여 수급세대

총 64세대 총 94,915,553원의 임대료 체납이 발생하였으며, 주거급여 부정수급으로 입주자의 도덕적 해이 및 임대료의 장기 체납이 유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2】 임대료 3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 중 주거급여 수급세대 : 생략

조치할 사항 인천도시공사사장은

[훈계] 위 대상자 F, G를 ‘훈계’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공공임대주택 입주세대 중 주거급여 수급세대 현황을 파악하여 별도 관리하시기 바라며, 주거급여 수급세대에서 임대료를 체납할 경우 해당 보장기관에 통보하여 주거급여 수급중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 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징 계 · 시 정 요 구

제 목 대행사업비 정산 부적정

기 관 명 인천도시공사

관 계 부 서 ♣과, <센터

징 계 대 상 자 <센터(現 ■■■) ●●●급 H

<센터(現 ▲▲) ●●●급 I

징 계 종 류 경징계

내 용

인천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는 「주거기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제17조에 따라 시로부터 인천광역시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2019년도부터 [표1]과 같이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라 ‘저소득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³²⁾’을 8개 구로부터 대행 받아 추진하였으며,

♣과에서는 2019년에 저소득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계획

32) 저소득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대상) 자가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차상위 장애인

(내용)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 가구당 500만 원 이내

(방법) 인천도시공사 위·수탁 대행

(예산) 총 549,500천 원(사업비 500,000: 시 50, 구 50 / 대행사업수수료 49,500)

을 수립하였고, 2022년도에 공사에는 8개 구의 대행사업수수료 총 49,500천원을 지급하였으며, 8개 구에는 사업비 총 250,000천원(사업비의 50%)을 교부하였다.

【표1】 저소득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현황 : 생략

1. 저소득 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저소득 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공사에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시 및 8개 구로부터 각각 대행 받아 추진한 사업으로 구의 대행사업비는 해당 구의 사업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사에서는 2021년도까지 구별 공사 가구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던 대행사업비의 항목별 정산방식을 2022년도부터 [표2]와 같이 다르게 하여 ★구, ㉠구, ㉡구 3개 구에서 다른 5개 구의 기타경비까지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에 대해, ★구, ㉠구, ㉡구에서는 공사에 정산의 세부산출내역을 요청하였으나, 감사기간 현재까지 공사는 정산 세부산출내역을 제출하지 않았고, 2022년도 대행사업비의 정산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표2】 연도별 대행사업비 항목별 정산방식 : 생략

저소득 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공사와 8개 구가 각각의 대행사업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구는 해당 구의 사업비 50%를 부담하여 공사에 지급하였으므로 각 구의 사업비는 해당 구의 사업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2021년도까지의 정산방식을 적용하여 공사 가구수 비율에 따라

사업비를 배분할 경우 2022년도의 대행사업비 반납액은 [표3]과 산출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공사에서는 2022년도에 각 구의 대행사업비를 혼용하여 사용함으로써 4개 구의 대행사업비 총 33,778,520원이 다른 구의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하였고, 2022년도의 대행사업비 정산방식을 임의로 변경하여 최종적으로 정산결과가 달라짐으로써 대행사업비의 정산이 확정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3】 정산방법을 달리하였을 때 대행사업비 반납내역 : 생략

2. 대행사업 정산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가. 관계 법령 및 판단 기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제4항에 따라 공사가 그 대행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또한, 2021. 3.19., 2021. 3.30.에 공사와 시 및 8개 구가 체결한 「저소득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위·수탁 업무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사는 당해연도 회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시 및 구에게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고 정산완료 후 집행잔액을 반납하여야 하고,

계약서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 및 구의 요구가 있을 때 공사는 운영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 및 구는 공사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 조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공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관계 사실

시 및 3개 구(★구, ㉠구, ㉡구)에서는 공사에서 2023. 1.26.에 시와 8개 구에 제출한 ‘2022년 저소득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결과 및 정산 보고(인천도시공사 <센터-**)’의 사업비 세부 집행내역이 불명확하여, [표4]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공사에 정산 관련 추가 자료를 요청하였다.

【표4】 시와 3개 구의 정산관련 추가자료 요청 및 정산 촉구 내역 : 생략

이에 대해, 공사에서는 2023. 2.20. 시 ㉢과에 ‘저소득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정산 관련 협조 요청(인천도시공사 <센터-**)’을 시행하며, ‘본 사업은 협약 당사자 간 별도 합의한 세부기준이 없으므로 인천㉡구청이 주장하는 해당 자치구의 대상가구수(16가구)를 기준으로 산출근거를 분개하여 제출할 수 없음’으로 의견을 회신하였고,

2023. 5.19., 2023. 5.26. ㉡구청에 ‘2022년 저소득 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정산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인천도시공사 <센터-**)’을 시행하며, ‘인천광역시(㉢과)는 본 사업 위·수탁계약서의 당사자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권한이 없거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자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귀 청이 본 사업의 정산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우리 공사는 이를 수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회신하였다.

또한, ㉢과에서는 2023. 5. 9. ㉡구청에 정산 관련 질의 회신(㉢과-**)을 시행하며, ‘인천도시공사가 일부 자치구의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였다면 이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위반’에 해당될 수 있고,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등에 해당되어 법령위반 사항으로 볼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 재정운영조례」 제46조제1항

에 의한 '목적외 사용' 및 제10조제3항에 의한 '사용목적에 위반되는 지출'에 해당될 수도 있다. 다만, 질의사항의 위반여부는 정산시 제출된 자료와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귀 구에서 검토 판단 할 사항임을 알려드린다.'고 회신하였으며,

2023. 6.23. ★구청, ㉠구청, ㉡구청에 보조금 정산을 위한 집행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며, '기 제출한 정산자료에 대해 정산 확정 및 보류 및 근거(지출 증빙자료 등)없는 이의 제기로 시를 포함한 8개 자치구의 정산이 지연되고 있으며, 향후 근거 없는 이의제기 등으로 인천시를 포함한 8개구 전체 사업 정산에 더 이상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란다.'고 공문을 시행(☞과-**)하였다.

저소득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과의 추진계획(시 ☞과-**, 2022.3.15.)의 저소득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세부업무처리기준 - III. 주요내용 - ㉢ 사업시행 방법에 따라 '사업방법은 각 구에서 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인천도시공사에 위탁(협약 체결)하여 시행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사와 시 및 8개 구가 각각 대행사업에 대한 위·수탁 업무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공사와 시 및 8개 구가 모두 위·수탁계약의 당사자이며 공사는 계약서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 및 구의 요구가 있을 때 운영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과는 사업 총괄계획을 수립하여 군·구에 시행하고, 8개 구의 대행 사업비를 총 부담하여 공사에 지급하였으므로 대행사업의 총괄 기관으로써 사업비의 총 정산을 하여야 하고, 8개 구는 자치구로써 각각 대행사업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공사에 지급하였으므로 각 구의 사업 물량 및 실적을 관

리하고 구별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사에서는 ★구청, ㉠구청, ㉡구청의 정산자료 추가 요청에 대해 2023년 5월 ㉡구청에 ‘권한이 없거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자이프로 본 사업의 정산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통보한 이후 정산자료를 추가 요청한 3개 구에 감사기간 현재까지 정산 세부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① H의 경우

H는 2021. 1. 11.부터 2023. 9. 6.까지 <센터에서 사업의 직접적 업무 관계자가 아님에도 업무 협조를 사유로 대행사업 관련 시행 공문에 협조결재를 하였다.

H는 ‘각 구의 대행사업비를 하나의 계좌로 관리하였으며, 8개 구의 사업비 전체를 구별로 구분없이 시 전체의 목표 가구 달성에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하였다’고 의견을 진술하였고,

★구, ㉠구, ㉡구의 입장에서 해당 구의 사업비가 다른 구의 지원사업에 사용된 것에 대한 질의에는 ‘대행사업은 한 통장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목적외 사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또한, H는 ‘시의 역할을 총괄관리로 보고 있었으나, ㉢과에서는 대행사업수수료만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3개 구와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하였고, 정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주지 않았다’며,

‘감사기간 현재까지 대행사업비가 정산되지 못한 책임은 시 ㉢과에 있고, 보조금 반납 행정처분은 권리 남용이므로 그에 대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H의 행위는 시 및 구의 정산내역 제출요구를 거부하며 직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감사기간 현재까지 대행사업비 정산내역 확정을 지연시킴으로써 인천도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18조³³⁾를 위반한 것으로, 인천도시공사 「인사규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내규 제66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② I의 경우

I는 2021. 3. 17.부터 2023. 6. 30.까지 <센터에서 저소득 장애인주택 편의 시설 설치 지원사업 업무를 담당하였다.

I는 “대행사업의 정산 기준이 없었으며, 정산보고를 할 때 준공내역서, 통장 지출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2022년도부터 사업의 정산방식을 변경함에 대해 3개 구에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의견을 진술하였다.

또한, I는 “대행사업수수료를 시에서 전체 지급하여 8개 구 각각의 사업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사업으로 보았다”며, “시와 협약을 한 번에 하지 않고 각 구와 각각 체결한 사유”에 대한 질의에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사업정산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구의 사업비가 해당 구 사업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계약서의 내용이 변경됨을 인지하였냐”는 질문에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아울러, “★구, ㉠구, ㉡구의 사업비가 다른 구의 지원사업비로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냐”라는 질의에는 “우리 정산 보고는 그렇게 했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33) 인천도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18조(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I의 행위는 시 및 구의 정산내역 제출요구를 거부하며 직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감사기간 현재까지 대행사업비 정산내역 확정을 지연시킴으로써 인천도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18조를 위반한 것으로, 인천도시공사 「인사규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내규 제66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조치할 사항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징계] 직무를 태만히 하여 대행사업비의 정산 확정을 지연시킴으로써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위 H, I을 ‘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① 각 구의 대행사업비를 구별 정산 사업량에 따라 재정산하고, 시 및 8개 구에 재정산 내역을 세부산출내역과 함께 제출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대행사업비의 정산이 확정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② 계약을 위반하여 각 구의 대행사업비를 혼용하여 집행함으로써 초과 사용된 사업비 총 33,778,520원(추정)을 해당 구에 반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 개선 요구

제 목 재산 사용허가 및 재산관리규정 운영 소홀

기 관 명 인천도시공사

관 계 부 서 ●센터

내 용

인천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는 「지방공기업법」과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산관리업무에 관한 주요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재산관리규정」을 제정하여 공사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고,

공사 소유 토지 10개 지번에 대해서는 「재산관리규정」 제25조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을 사유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을 허가하여 관리하고 있다.

1. 재산의 전대에 관한 사항

「재산관리규정」 제37조에서는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약칭: 공유재산법)」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공유재산법」 제6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공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고,

「공유재산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유재산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공사로부터 재산의 사용을 허가 받은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가 받은 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다.

그러나, [표1]과 같이 공사에서는 시 ♣과에 사용을 허가한 **동 **번지(141,033㎡, ***** 부지)의 일부 면적(50,692㎡)을 구청이 시 ♣과에서 전대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한 사항에 대해 「재산관리규정」 등의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않고 승인하는 등 재산의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을 소홀히 하였다.

【표1】 **동 **번지(***** 부지) 사용 허가 내역 : 생략

2. 재산 무상사용 허가기간에 관한 사항

「재산관리규정」 제25조에 따르면 사장은 다음 각 호³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37조에서는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약칭: 공유재산법)」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공유재산법」 제

3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익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로부터 공익목적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해당 위탁업무에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3. 천재지변 및 그 밖의 재난·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재해복구 등에 필요한 경우

21조제1항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에서는 [표2]와 같이 인천 ㉠구청에 **동 **-*번지에 대한 재산 사용 허가를 연장하며 공유재산법 제21조제1항을 준용하여 사용허가 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지 않고, ‘우리공사 토지 필요시기까지’로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허가하였다.

아울러, 「재산관리규정」 제26조에 따라 소관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대부(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받아, 재산(유상, 무상) 사용허가서(별지 제5호 서식) 및 허가조건(별지 제5-1호 서식)에 사용허가 목적, 사용허가 기간 등을 갖추어 사용허가 할 수 있으나,

공사에서는 ㉠구청으로부터 사용허가 요청 공문과 현장사진 외에 별도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지 않았고, 「재산관리규정」 별지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을 첨부하지 않고 사용허가 공문만으로 재산을 사용허가 하는 등 재산 무상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을 소홀히 하였다.

【표2】 **동 **-*번지 재산 사용 허가 내역 : 생략

3. 재산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재산관리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사장은 소관재산을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 내에서 신청인으로부터 대부(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재산(유상, 무상)사용허가서(별지 제5호 서식), 재산대부계약서(별지 제6호 서식)를 받아 다음 사항³⁵⁾을 갖추어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별

35) 1. 물건의 표시 2. 인근지 임대실투조서(또는 무상으로 하는 사유) 3. 사용차주 또는 임차인의 주소, 성명 4. 대부 또는 사용허가 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 6. 도면 7. 기타 필요한 증명(토지·건축물관리대장 등본, 도시계획확인원)

지 서식은 [표3]과 같다.

【표3】 재산관리규정 별지 제4호, 제5호, 제6호 서식 : 생략

공사의 재산은 「재산관리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사항이므로 유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 재산대부계약서를 사용하고,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재산(유상, 무상) 사용허가서를 사용한다.

따라서, [별지 제5호 서식]의 재산(유상, 무상) 사용허가서는 무상으로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재산 사용허가서 또는 재산(무상) 사용허가서로 명칭을 개정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의 대부(사용허가) 신청서는 대부 신청서와 사용허가 신청서로 서식을 따로 마련하여야 한다.

아울러, 「재산관리규정」 제26조제1항에서 신청인으로부터 받도록 하는 재산(유상, 무상) 사용허가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사용허가신청서를 검토하여 사용을 허가하며 공사에서 교부하는 서식이며, 재산대부계약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공사와 신청인이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서식이므로 규정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어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조치할 사항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시정] ① 재산관리규정에 따라 재산을 전대하지 않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②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의 재산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관계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산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구 **동 **-**번지 재산 사용허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므로 사용허가 절차 및 조건을 적법하게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별지 제4호 서식]의 대부신청서 서식 분리, [별지 제5호 서식]의 명칭 개정 등 서로 상충되는 「재산관리규정」의 내용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공공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 관리 업무 소홀

기 관 명 인천도시공사

관 계 부 서 ▽처

내 용

인천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는 공공임대주택 4개 단지에 대해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 관리하고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³⁶⁾하는 공공임대주택사업자는 법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검사일(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립요율³⁷⁾에 따라 매달 적립하고,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사에서는 특별수선충당금 적립대상인 공공임대주택 4개 단지(●●●●●●, ○○○○, ◇◇◇◇, ◆◆◆◆)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을 매월 적립하여 관리

36)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며, 1997년 3월 1일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

37) 1.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4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공임대주택: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당시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1

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사에서는 [표]와 같이 공공임대주택 4개 단지의 특별수선충당금을 관리하며 적립대상 공공임대주택단지별로 매달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고 2022년도에는 12월에 연간 특별수선충당금 총 81,509,904원을 소급하여 적립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감사기간 현재까지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는 등 공공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공공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주의] 공공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을 공공임대주택 단지별로 매달 적립하여 공공임대주택 단지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지출되도록 특별수선충당금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미이행

기 관 명 인천도시공사

관 계 부 서 ◎처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구매규격 사전 공개와 관련한 이의제기 사항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 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천도시공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규」 제2조에 계약심의대상은 추정가격이 7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 (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이며 입찰참가자 자격 제한,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등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집행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따라서 사업부서에서는 추정가격 70억원 이상 공사, 추정가격 20억원 이상의 물품

및 용역 계약에 대하여 발주 전 계약담당부서에 계약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을 의뢰하고 계약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계약 의뢰해야 하며 계약부서에서는 계약 관련 법령과 사규에 맞게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계약심의 이행여부를 확인 후 계약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천도시공사에서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27건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이 시행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 판단하여 [표]와 같이 계약심의위원회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3년 동안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1건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등 계약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 이행없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미이행 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주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경고·주의 요구

제 목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부적정

기 관 명 인천도시공사

관 계 부 서 ◆사업단

훈계대상자 ◆사업단(現 ■■■) ○○○급 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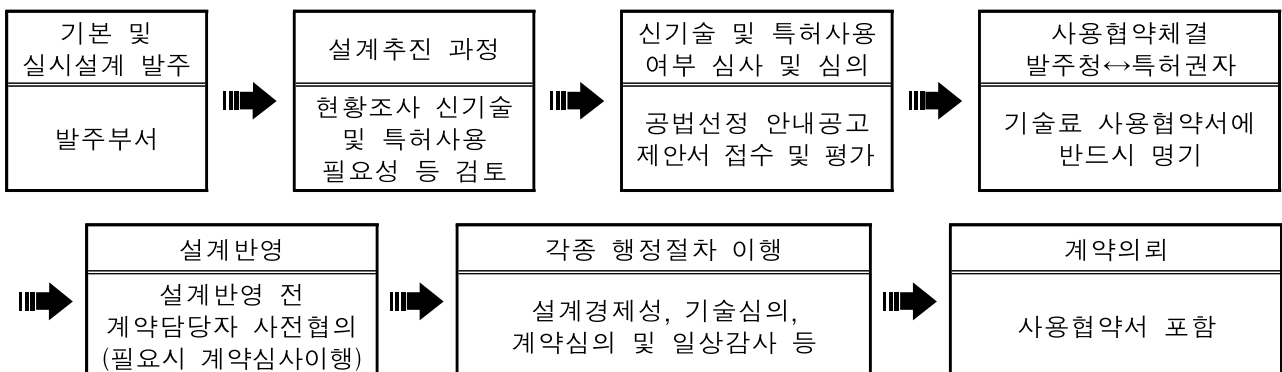
경고대상자 ◆사업단 ○○○급 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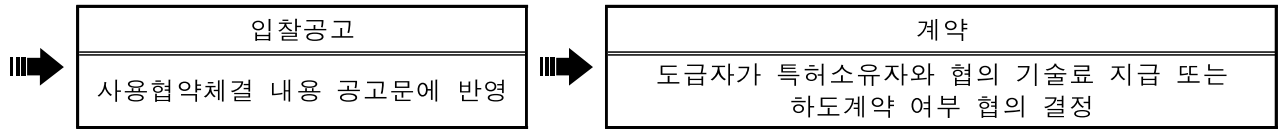
◆사업단(現 ▲▲) ○○○급 M

내 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별표2>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기준을 적용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할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참고와 같다.

[참고] 신기술 및 특허적용 절차





1. 신기술사용협약자와 특허통상실시권자를 기술보유자로 인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12절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에 제안 참여자는 공사에 적용할 공법선정에 참여한 신기술·특허공법의 보유자를 말하며 통상실시권자 및 신기술 사용협약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 질의답변에 따르면 특허공법을 이유로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할 때에 「특허법」상 특허권은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 등 제3자에 대한 권리승계가 인정되어 ‘특허공법을 보유한 자’의 범위에는 해당 특허권자뿐만 아니라 전용 및 통상실시권자도 포함(****과-****, ****.**.*)된다고 되어 있으나 관련 규정을 확인해 보면 특허공법 보유자의 범위와 기술사용협약 체결 대상자는 [표1]과 같고 지방계약의 경우 통상실시권자는 기술사용협약 체결 대상에서 제외된다.

【표1】 특허공법 보유자의 범위 및 기술사용협약 체결 대상 : 생략

그러나 인천도시공사는 ① □□□□ 도시시설물 기본 및 실시설계관련 터널 [프리캐스트 아치], 터널[외부방수], 터널[강관보강그라우팅], 터널[절토부 옹벽], 교량 (합성형라멘교), 교량(PF 거더교), 교량(합성형 라멘교), 교량(케이블보강 거더교), 터널(절토부 옹벽)의 공법선정. ② ■■■■ 기본 및 실시설계관련 수질개선시설 공법선정을 위한 기술제안. ③ ○○○○ 도로확장공사 설계관련 ▲▲▲ 초기우수처

리시설, 보강토옹벽공법 선정 공고문에 제안자 참가자격을 신기술보유자, 특허권자, 특허전용실시권자뿐 아니라 신기술사용협약자와 특허통상실시권자까지 인정하였다.

그 결과 □□□□ 도시시설물 터널#1의 외부방수에 점·접착EVA 복합시트를 이용한 비노출 방수공법을 선정하였으며 관련 규정에 기술보유자로 인정되지 않는 신기술사용협약자인 ◁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2】 점·접착EVA 복합시트를 이용한 비노출 방수공법 신기술사용협약 현황 : 생략

2. 지역가점 부여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 관련 법규에 지역업체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행정안전부 질의답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별표2>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한 공법선정 평가는 해당 공사의 특성에 따라 유사한 다수의 신기술·특허 공법 중 해당 공사계약 발주목적에 기여하는 최적의 공법을 선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제안된 신기술 등 공법내용과 무관하게 지역업체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는 것과 해당 공법에 대한 제한적인 권리를 가진 통상실시권자가 참여토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였다.

그런데 인천도시공사는 目目目目 도시시설물 기본 및 실시설계 자재·공법 선정절차 적용 방안(☞사업단-****호, ****.***.**)을 수립하여 지역업체 및 공사 적용 신기술에 대한 가점 부재로 지역업체 참여율이 저조하므로 舊인천도시공사 자재공법 선정 절차 및 위원회 운영 지침의 ‘사업부서장은 소관사업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용범위 및 심의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지역가점(3~10점)과 인천도시공사 선정 신기술가점(2점)을 가감점항목에 반영³⁸⁾하였다.

이후 〇〇〇〇 도시시설물(교량) 자재·공법 선정 계획(◆사업단-****호, ****.**,**) 및 〇〇〇〇 도로확장공사 자재·공법 선정절차 적용 방안(◆사업단-****호, ****.**,**)을 수립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은 ‘21.4.1.이후 설계용역의 입찰 공고부터 적용되므로 위의 자재·공법은 현행 公社기준을 적용하여 지역업체 가점(3~10점)을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도시공사에서는 ① □□□□ 도시시설물 기본 및 실시설계관련 터널[프리캐스트 아치], 터널[외부방수], 터널[강관보강그라우팅], 터널[절토부 옹벽], 교량(합성형라멘교), 교량(PF 거더교), 교량(합성형 라멘교), 교량(케이블보강 거더교), 터널(절토부 옹벽)의 공법선정. ② 〇〇〇〇 도로확장공사 설계관련 ▲▲▲ 초기우수처리시설, 보강토옹벽공법신기술·특허공법 제안 공고시 [표3]과 같이 지역업체 가점을 부여하였다.

【표3】 지역업체 가점부여 현황 : 생략

또한 인천도시공사의 ‘〇〇〇〇 도로확장공사’의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위원회 결과는 지방계약예규에 따라 지역업체 가점을 부여하지 않았을 경우 [표4]와 같이 2순위 업체가 선정되므로 부당한 가점부여로 업체순위가 변경되었다.

【표4】 〇〇〇〇 도로확장공사 자재·공법 선정위원회 개최 결과 : 생략

38) 행정안전부 예규의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안)에 해당 공법평가와 관련 없는 평가항목을 포함해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있어 가감점 항목에 반영

3. 자재·공법 심의위원회 심의 미이행

인천도시공사 ○○○○○ 도로확장공사 자재·공법 선정계획변경(◆사업단-****호, ****.**.*)에 따르면 제안공고 접수결과 보강토 옹벽은 1개사(♣)만 제안접수하였고 재공고에도 1개사(♣)만 접수하여 선정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표5]와 같이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였다.

【표5】 ○○○○○ 도로확장공사의 보강토 옹벽 공법 기술사용협약 : 생략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은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설계에 신기술·특허공법을 반영하려는 경우는 해당 공사와 관련한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안내 공고 하는 것이며 재공고 실시결과 제안 참여자가 1인인 경우에는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제안된 공법을 평가하여 해당 공사에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인 공법과 비교하여 우수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공사의 공법으로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선정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한 후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인천도시공사의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공고(2021년)는 인천광역시 건설심사과의 신기술·특허공법 등 선정기준(2021.4.2.)을 적용하여 신기술협약보유자와 특허통상실시권자를 기술보유자로 인정하고 지역업체 가점을 부여한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나 이는 공사가 아닌 설계용역의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문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본 용역과 관련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인천시에서는 신기술·특허공법 등 선정기준 제차 알림 및 의견수렴(2021.4.14.) 문서를 발송하였으며 그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과-****호, ****.**,**) 결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별표2>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한 공법선정 평가는 해당 공사의 특성에 따라 유사한 다수의 신기술·특허공법 중 해당 공사계약 발주 목적에 기여하는 최적의 공법을 선정하는 것으로, 제안된 신기술 등 공법 내용과 무관하게 지역업체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는 것과 해당 공법에 대해 제한적 권리를 가진 통상실시권자가 참여토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안전부 기준을 준수하여 업무를 추진하라는 것이다.

결국 인천도시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신기술·사용협약자와 특허통상실시권자를 기술보유자로 인정하지 않음에도 이를 허용하였고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지역업체 가점 부여의 근거가 없음에도 내부방침을 수립하여 지역업체 가점을 부여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하였으므로 인천도시공사의 의견은 인정하기 어렵다.

5. 업무 담당자의 부당한 업무 처리

① K의 경우

K는 2020.12.09.부터 2021.01.11.까지 ◆사업단에 근무하면서 ㉹㉹㉹㉹ 도시시설물 기본 및 실시설계의 자재·공법 선정 적용 방안 수립의 실무담당자로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 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제8조의 지역업자의 하도급 비율 70% 이상 권장,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의 건설 기술의 활용 등을 근거로 지역업체(최소3점에서 최대10점), 인천도시공사 일반적용 신기술(2점)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자재·공법 선정평가표에 반영하였다.

결국 K는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계 법령에 지역업체 가점부여의 근거가 없음에도 지역업체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내부방침을 수립한 책임이 있다.

② L의 경우

L은 2021.01.11.부터 2021.05.09.까지 ㉹㉹㉹㉹ 도시시설물(터널)의 자재·공법 선정계획, 선정위원회 운영 및 결과보고 실무담당자로서 공법 선정 공고문에 제안자 참가자격을 신기술보유자, 특허권자, 특허전용실시권자뿐 아니라 신기술 사용협약자와 특허통상실시권자까지 인정하였으며 지역업체 가점을 부여하였다.

그 결과 총6개 업체의 제안 중 ㉹㉹㉹㉹ 도시시설물 터널#1의 외부방수에 점·접착EVA 복합시트를 이용한 비노출 방수공법을 선정하였으며 관련 규정에 기술보유자로 인정되지 않는 신기술사용협약자인 <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결국 L은 업무담당자로서 관련 규정을 명확히 검토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위반하여 기술보유자가 아닌 기술사용협약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한 책임이 있다.

③ M의 경우

M은 2021.06.07.부터 2021.07.26.까지 ○○○○ 도로확장공사 자재·공법 선정 절차 적용방안 수립 및 선정계획의 실무담당자로 신기술·특허공법 제안공고 시 제안자 참가자격을 신기술보유자, 특허권자, 특허전용실시권자뿐 아니라 신기술사용협약자와 특허통상실시권자까지 인정하였으며 지역업체 가점을 부여하였다.

그 결과 초기우수처리시설, 교량받침 공법은 1순위 업체의 지역업체 가점을 제외하고 산정할 경우 2순위 업체의 점수가 높아 업체 순위가 변경되었다.

또한 자재공법선정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신기술·특허공고 재공고 후 참여업체가 1인 이하일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가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임의로 적용하여 공법심의 절차 없이 보강토 옹벽 공법을 선정하였다.

M은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계 법령에 지역업체 가점부여의 근거가 없음에도 명확한 검토 없이 지역가점을 부여하였고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재공고입찰 규정을 임의로 적용하여 공법 심의절차 없이 특정공법을 선정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한 책임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주의] 신기술·특허공법 등을 설계에 포함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제안공고하시고 기술보유자(통상실시권자와 신기술사용협약자는 제외)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경고]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 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한 위 관련자에게 「훈계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및 기관경고

제 목 평가급 지급 부적정

기 관 명 인천도시공사

관 계 부 서 □처

내 용

1. 판단기준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직원 평가급은 경영평가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인센티브 평가급’과 경영평가 결과에 관계없이 기관에서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자체 평가급’으로 구분되며 기관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인센티브 평가급 지급률과 자체 평가급 지급률을 개인별로 적용하여 합한 총액 범위 내에서 평가급 지급총액을 결정하고 지급총액 한도 내에서 근무실적 평가 등을 고려하여 개인 또는 부서단위로 4등급 이상으로 차등을 두어 지급한다.

그리고 평가급을 단순 나눠먹기식 배분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각 기관별로 평가급 지급에 관한 차등화 된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차등수준을 강화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개인별 또는 부서단위 근무성적·업무성과 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각 법인의 내규로 규정·시행하되 개인별 근무평정은 평가급 지급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대상기간으로 한다.

또한 최고-최저등급 간 지급률 차이는 50%p 이상으로 하고, 등급별 인원비율도 최고는 20% 이내, 최저는 10% 이상으로 강제 배분하며 특정 등급의 인원 배분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인센티브 평가급 및 자체 평가급 모두 해당된다.

아울러 임원급 인센티브 평가급은 상임이사, 감사, 임원급 직원에 해당되는 직원이 적용되며 최고-최저등급간 지급률 차이는 50%p 이상으로 하고, 등급별 인원비율도 최고는 20% 이내, 최저는 10% 이상으로 강제 배분하고 평가급 지급제외 대상기간은 휴직, 직위해제, 장기병가, 징계, 공로연수 등의 사유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일할계산하여 제외한다.

2. 관계사실

인천도시공사 「보수규정」 제21조에 자체 평가급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직원에게 경영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지급하는 평가급으로 인원배분 및 지급률은 [표1]과 같이 하고 자체 평가급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등 구체적인 지급방법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제21조의2에 경영평가에 따른 평가급은 임·직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이 전년도 경영평가 결과에 의하여 결정한 지급률에 따라 평가급을 지급하며, 인원배분 및 지급률은 [표1]과 같이 하고 평가급은 경영평가 결과를 확정·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지급하며,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표1】 평가급 지급 배분율표 : 생략

그러므로 인천도시공사에서는 자체평가급과 인센티브 평가급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및 보수규정에 따라 자체평가급을 S,A,B,C 4등급으로 구분하여 각 등급에 따른 지급률(S등급+20%, A등급+5%, B등급-10%,C등급-30%)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인센티브 평가급 또한 S,A,B,C 4등급으로 구분하여 각 등급에 따른 지급률(S등급+20%, A등급+5%, B등급-10%, C등급-30%)을 적용하여 계산한 후 각 지급액을 합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인천도시공사에서는 [표2]와 같이 S등급은 평가급 지급률+10%, A등급은 평가급지급률+2.5%, B등급은 평가급지급률-5%, C등급은 평가급지급률-15%로 적용하여 인센티브평가급과 자체평가급을 구분하여 지급하였고 이를 합산하면 보수규정의 기준을 준수하였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과 보수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평가급 자체총액한도와 전체평가급 지급액은 동일하지만 S, A, B, C등급 간의 지급률 차이를 줄임으로써 S,A등급의 평가급을 B,C등급에게 나누어 배분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표2】 연도별 평가급 지급률 : 생략

한편 인천도시공사의 직원 평가급 지급 계획³⁹⁾ 문서에 직급별 평가기준은 [표3]와 같으나 평가 세부기준을 [표4]와 같이 연도별로 다르게 수립하였다

【표3】 직급별 평가기준 : 생략

【표4】 연도별 평가 세부기준 : 생략

이에 따라 개인종합평가는 2020년은 2019년 상·하반기 개인종합평가 점수를 각 50%로 환산하여 적용하되 상반기 또는 하반기 평점만 있는 직원은 해당 반기 점수를 적용하고 연도 중 휴직 등으로 평정점이 없는 직원은 직전 개인 종합평가 점수를 적용, 2021년은 2020년 상·하반기 개인종합평가 점수를 각50%로 환산하여 적용하되 상반기 또는 하반기 평점만 있는 직원은 해당 반기 점수를 환산하여

39) ****처-****(2020.**.**.), ****처-****(2021.**.**.), ****처-****(2022.**.**.)

적용하고 휴직 등으로 상·하반기 평가점수가 모두 없는 경우는 기준지급률을 지급, 2022년은 2021년 상·하반기 개인종합평가 점수를 각50%로 환산하여 적용하되 상반기 또는 하반기 평점만 있는 직원은 해당 반기 점수를 환산하여 적용하고 휴직 등으로 상·하반기 평가점수가 모두 없는 경우는 예외자(C등급)기준을 적용, 2022년 평가급 지급 계획 변경하여 육아휴직자, 가족돌봄휴직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를 고려하여 C등급에서 B등급으로 조정하여 지급하였다.

또한 CS종합평가는 2020년은 외부파견, 휴직 등으로 미평가자는 소속부서의 평가점수를 적용, 2021년과 2022년은 휴직자, 운전직 등으로 점수가 없는 경우 전사 직원 평균점수를 적용하였다.

아울러 2020년~2022년까지 상임이사, 상임감사, 임원급 직위에 해당하는 직원(1급 본부장)은 성과평가 기준에 따라 개인별 차등, 개인별 4개 등급으로 최고~최저 등급간 지급률 차이는 50%를 적용하되 상임감사는 등급적용 예외로 하여 인천시에서 결정한 지급기준률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평가급 지급 내역 중 [표5]와 같이 ①임원 인센티브 평가급 지급 시 상임감사 평가등급을 보수규정에서 정한 S,A,B,C등급으로 구분하지 않고 기준지급률을 적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5개 등급으로 지급, ②2020년 평가급 지급 시 2019년 연도 중 휴직 등으로 개인종합평정점이 없는 직원은 2018년 개인종합평가 점수 적용으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별 근무평정 대상기간 미준수, ③2021년 직원 평가급 지급 시 노조 전임자, 장기교육자, 휴직 등으로 연도 중 개인종합평가 점수가 없는 자(15명)를 등급적용 예외로 두어 기준지급률(140%)를 적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5개 등급

으로 지급, ④2022년은 육아휴직자, 가족돌봄휴직자를 C등급에서 B등급으로 조정하여 지급한 것을 확인되었다.

【표5】 평가급 지급 부적정 현황 : 생략

결국 인천도시공사는 연도별 세부평가기준을 다르게 수립하여 보수규정에서 정한 평가급 등급구간 4등급을 위반하여 5등급으로 지급하였으며 2021년 등급적용 예외자 15명에게 지급기준률(인센티브평가급140%, 자체평가급100%)를 지급하여 장기교육, 노조전임자, 육아휴직으로 실제 근무기간이 거의 없음에도 B등급(인센티브평가급130%, 자체평가급95%, 96명), C등급(인센티브평가급110%, 자체평가급85%, 34명)보다 높은 지급률이 적용되는 효과를 가져왔고, 2022년 육아휴직자, 가족돌봄휴직자를 남녀평등고용법의 불이익처우를 고려하여 C등급에서 B등급으로 조정(11명)하여 지급하였으나 상대적으로 C등급(40명, 공무원제외)을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성과평가를 통해 등급 간 차등을 두어 직원 및 부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평가급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게 되었다.

3.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인천도시공사에서는 평가급과 자체평가급을 합산하여 최고~최저 등급 50% 차등을 두어 지급한 것은 관련 규정 위반이 아니며 인천시의 2021년 보수 운영 실태 점검시 평가급 지급에 관해 별도 지적사항이 없었고, 상임감사의 평가급을 기준지급률로 적용한 것은 그 동안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상임감사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며, 2020년~2021년은 평가급 지급 대상이나 평가 점수가 없는 자들에 대한 등급산정 세부기준이 없어 사장 방침으로 기준을 수립하였고, 2022년은 육아휴직자와 가족돌봄휴직자의 등급을 조정하여 지급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직원에 대한 등급을 상향 조정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인천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과 인천도시공사의 보수 규정을 준수하여 평가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관련 규정에 지급기준률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으로 내부방침을 수립하여 연도별로 평가 세부기준을 다르게 적용했다는 의견은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에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22조의2제6항에서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것으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이나 도시공사 보수규정에 휴직자에 대한 성과급 산정을 일률적으로 최저등급으로 적용한다고 규정하지 않았으며 휴직자도 평가 대상이라면 정당한 평가 절차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평가급을 지급하는 것이지 휴직으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받는다고 단정한 후 일괄적으로 등급을 상향하여 적용하는 것은 평가급의 지급 취지에 위배된다.

조치할 사항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주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 및 「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평가급 지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관경고] 평가급을 부적정하게 지급하여 엄중경고하오니,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공사용자재 우선구매 검토 소홀

기 관 명 인천도시공사

관 계 부 서 ◎처

내 용

1.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수의계약 대상자를 정하고 있으며 이중 천재지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대상을 34개로 한정하고 있고 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호⁴⁰⁾의 어느 하나

40) 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②「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 장관으로부터 인증·지정된 유효기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그 규격을 명확하게 확인하여 우수조달, 성능 등 인증제품이 아닌 유사한 규격의 제품이 수의계약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품의 설치 등에 수반되는 부속적인 성격의 제품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포함할 수 없고, 사업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요청할 시 특수한 기술개발제품이 필요하거나 자재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술개발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한 경우 외에는 사업부서가 특정제품 규격 등을 설계도서에 명시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요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계약체결의 요청)에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계약체결의 요청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법 제12조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법 제13조에 따른 다수공급자 계약을 말한다.

아울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다수공급자 계약)에 따른 다

③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④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⑥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

⑦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를 협약한 제품

⑧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

수공급자계약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제49조(2단계경쟁 대상) 및 제51조(2단계경쟁 회피금지), 제52조(2단계경쟁 제안요청)에 따라 다수공급자 계약이 체결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 2단계경쟁 대상(한 번에 다수의 세부품명·품목에 해당하는 물품들을 구매할 경우 각 물품별 금액을 모두 포함)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물품을 임의로 선택하여 구매하는 대신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 요청한 후 선정 기준에 따라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제52조의3(2단계 경쟁 제안공고)에 따라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 단계경쟁에 참여할 제안요청 대상자를 별도로 선정하지 않고 2단계경쟁 제안 공고를 거쳐 제안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적정한 품질과 납품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 이행능력에 대한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경쟁 등의 입찰, 그 밖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외의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이법과 다른 법률에서 우선구매 대상으로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이나 수의계약에 따라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경쟁입찰을 예외로 할 수 있다.

2. 관계사실

인천도시공사에서는 공사용 자재 납품업체 선정방식 검토(2013년), 우선구매 실적 개선(2016년), 공사용자재 우선구매 촉진방안(2019년), 우선구매 의무이행 철저(2020년), 우선구매활성화 개선방안(2023년)을 수립하여 부서별 우선구매 실적을 BSC 지표에 반영하고 물품관리지침을 개정하여 자재 계약의뢰 시 우선구매 제품 해당여부 검토를 의무화하고, 우선구매 체크리스트를 신설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중증장애인, 사회적기업, 녹색제품, 혁신구매, 창업기업의 자재 등을 체크하여 구매의뢰, 공사용자재 우선구매 대상품목을 지정을 하였으며 우수구매 실적이 높은 부서에 포상을 하고 있다.

세부절차는 관급자재 우선구매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진되며 ①관급자재 발주 대상 자재 선정. ②혁신제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적달성 제품 존재 여부 확인 후 중증장애인, 혁신제품 5,000만원 이상은 한국장애인개발원 계약의뢰, 조달청(혁신장터) 계약의뢰, 5,000만원 이하는 자재 수의계약 시행/기술개발제품은 쇼핑몰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 쇼핑몰에서 구매, 미등록시 자재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 시행, ④녹색제품 중 구매목적달성 제품 존재여부를 확인한 후 녹색제품을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구매가 가능할 경우 우선구매 업체선정 평가표를 작성하여 구매, 쇼핑몰에서 구매가 불가능할 경우 제한입찰 시행, 녹색제품이 없을 경우

쇼핑몰에서 구매 가능한 제품을 우선구매 업체선정 평가표를 작성하여 구매하고 쇼핑몰 구매가 불가능할 경우 입찰 및 수의계약시행(자재설계금액에 따라 계약 방법 선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급자재를 구매하고 있으며 우선구매업체 선정 평가 점수표는 [표1]과 같다.

【표1】 우선구매 업체 선정 평가 점수표 : 생략

한편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세부지표에 지역상생발전 지표가 있고 인천도시공사의 2021~2023년까지 연도별 지역상생발전 정량세부평점은 [표2]와 같다.

【표2】 경영평가 지표 중 지역상생발전 정량세부평점 : 생략

결국 인천도시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수의계약 사유는 엄격하게 한정적으로 해석·적용해야 함에도 특정제품의 필요성, 타 제품과 성능 비교·분석, 종합쇼핑몰에 유사물품이 등재(우수제품, 다수공급자계약 등)여부, 대체·대용품 유무 등을 검토하여 사업목적, 용도, 제품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하여 계약을 진행해야 함에도 우선구매를 사유로 수의계약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이나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제안공고를 통해 업체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및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일반입찰이나 다수공급자 2단계경쟁이 가능함에도 경영평가 실적을 위해 개별법에 따른 우선구매제도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붙임]와 같이 관급자재를 구매하였다.

아울러 인천도시공사의 관급자재 구매과정을 확인한 결과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등록된 물품이 다수가 있음에도 우수조달제품(제3자단가)로 등록된 물품만 비교하여 우선구매 업체선정 점수표 배점에 따라 점수가 높은 물품을 우선구매하고 있으며 우선구매가 불가능할 경우에만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방식으로 구매하고 있으나 쇼핑몰에 등록된 납품업체 중 설계내역서 규격으로 납품이 가능한 업체는 다수임에도 녹색제품을 보유업체로 제한하여 5개사 미만으로 제안요청을 하고 있다.

또한 인천도시공사의 공사 설계내역을 확인한 결과 자재 설계서에는 특정 자재가 아닌 일반자재로 설계하여 표준시방서를 작성하였으며 조달청에 수의계약을 의뢰하는 경우에만 조달청에서 수의계약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특정자재 설계와 시방서 반영 여부를 확인하므로 설계와 시방서에 해당 자재가 포함되도록 수정하여 제출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관급자재 우선구매 활성화 제도의 변경 등이 필요하다.

3.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인천도시공사에서는 1.개별법에 따른 중기업 기술개발제품, 녹색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일반제품보다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각 부처의 의무 및 권고사항을 이행한 것이며 관급자재 구매시 종합쇼핑몰의 유사물품 등제여부, 대체·대용품 유무 등을 검토하여 사업목적, 용도, 제품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구매 대상품목을 구매한 것이고 2.업체선정 평가 점수표는 전년도 우선구매 실적을 분석하여 정부권장목표 및 경영평가 실적 대비 미비한 실적에 대해 판로지원을 적극 이행하고자 제작하였으며 우수한 우선구매 조건의 대항품목 중 경제적인 제품을 우선구매하고자 제작한 것으로 우선구매가 제외된 계약건에 대해서는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경쟁, 입찰 등의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고 4. 조달청 수의계약을 의뢰하는 경우에 설계서와 시방서에 해당 자재가 포함되도록 수정 제출한 것은 인천지방조달청에서 표준시방서에 의한 특정 자재 구매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며 기관 간 업무절차 상의 차이로 발생한 문제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인천도시공사의 공사용자재구매 시행계획을 확인한 결과 계약방법 및 업체 선정 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여부와 인천도시공사의 관급자재 우선구매 실적 개선안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기술개발제품, 사회적기업 제품 등을 순서대로 검토할 뿐이며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의 목적종합쇼핑몰의 유사물품 등재여부, 대체·대용품 유무, 제품성능 등을 검토하여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지 않았다.

또한 인천지방조달청에서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특수한 기술 개발제품이 필요하거나 자재선정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기술개발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한 경우 이외에는 특정자재로 한정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자재 설계와 시방서의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인천도시공사의 의견은 인정하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주의] 우수조달 등을 사유로 특정업체 제품을 선정하여 수의계약하지 않도록 수의계약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계약의 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경쟁 등의 방법으로

계약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급자재 구매 현황 : 생략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도시공사

관 계 부 서 ◆사업단, ●처, ▨처, □처, ■처

내 용

인천도시공사에서는 계약 업무 추진 시 「회계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에 따라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등이 요구되는 물품, 용역계약에 대하여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는 아래 [표1]과 같고,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분야 중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정량적 평가 전체 배점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표1】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 생략

그러나 인천도시공사는 [표2]과 같이 20**년 ◆◆◆◆ 구축 등 4건의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면서 기술평가의 정량 및 정성적 평가분야 배점한도를 각 10점 범위 내에서만 가감하여 정량 평가는 10점~30점, 정성 평가는 50점~70점 내로만 조정하여야 함에도, 정량 평가 5점, 정성 평가 75점과 85점으로 조정하여 제안서를 평가하였다.

【표2】 평가분야별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미준수 현황 : 생략

또한, [표3]과 같이 20**년 ○○○○ 개발 등 11건의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면서 정량적 평가의 항목별 배점이 전체 배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33.3%, 50% 등의 배점으로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 정량적 평가의 항목별 배점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표3】 정량적 평가 항목별 배점기준 미준수 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주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평가분야별 배점 기준을 준수하여 신뢰성 있는 제안서 평가가 실시되도록 하시기 바라며, 제안서 평가 관련 규정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용역 발주 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적정

기 관 명 인천도시공사

관 계 부 서 ○실, ◎처, ▽처, ◆사업단, ■처

내 용

인천도시공사에서는 계약 업무 추진 시 「회계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수한 기술·공법 등이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실적 제한하는 사례 등을 입찰 및 계약 시 금지해야 할 사항으로 규정⁴¹⁾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2절 제한입찰의 범위와 구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⁴²⁾ 이상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일 경우에 한해서 해당 계약 목적물과

4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절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42) 용역의 경우, 2020년 2억원 이상, 2021~2022년 2022년 2.1억원 이상, 2023년 2.2억원 이상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 할 수 있고, 제3절 제한기준과 방법에 따르면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최근 10년 이내 실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용역의 수행 실적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이상이면서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이어야 하고, 이 경우에도 최근 10년 이내의 실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그러나 인천도시공사에서는 [표]와 같이 8건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한요령과 맞지 않게 위탁관리, 타당성검토, 전략 수립 등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이 아님에도 최근 3년 또는 5년 이내의 실적으로 제한하는 등 부당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공고하였다.

【표】 실적 제한입찰 발주 현황 : 생략

그 결과, 8건의 용역 중 5건의 용역은 1개 업체만 단독응찰 하였고 이에 따라 유찰되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항⁴³⁾에 따라 제안서 평가 후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제한경쟁입찰 중 낙찰자 결정을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등이 요구되는 용역일 때이며, 이 경우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등을 저해하거나 제한할 수 있어 협상에 의한 계약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43)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2020.7.15.~2023.12.31.) 고시한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 뿐인 경우,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업체의 실적은 정량적 평가 시 수행경험(실적)을 항목으로 평가하여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특수한 기술·공법·설비 등이 요구되는 용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실적으로 제한입찰로 발주하는 것은 다수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

조치할 사항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주의] 앞으로 관련 규정을 위배하여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이 아님에도 입찰참가자격을 실적으로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관련 규정 준수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주의 요구

제 목 용역계약 지연배상금 부과 소환

기 관 명 인천도시공사

관 계 부 서 ◎처

내 용

인천도시공사는 계약 업무 추진 시 「회계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예규’라 한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준공 등의 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준공 등 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 등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 등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삽입하여야 한다. 다만, 준공 등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준공 등 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아울러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에 따르면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을 부과 받은 자는 수의계약 배제 대상이므로, 지체일수가 1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연배상금 부과 후 즉시 관련 기관에 수의계약 배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천도시공사에서는 [표]와 같이 ■■■■■ 용역 등 3건의 용역을 추진하면서, 계약상대자로부터 준공기한을 지나 준공신고서 등을 제출받고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거나 대금지급 시 상계처리하지 않았고, ‘■■■■■ 대행 용역’의 경우에는 지체일수 18일로 계약상대자가 10일 이상 지연배상금을 부과 받은 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배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표】 준공신고서 지연 제출로 인한 지연배상금 미부과 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미부과한 지연배상금을 조속히 부과(1,159천원)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 실시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기관경고

제 목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 공정관리 등 감독 소홀

기 관 명 인천도시공사

관 계 부 서 ○처

내 용

인천도시공사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20**. **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20**. **월 개발계획 승인 및 20**. **월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와 공동사업시행자로 ■■■■ 택지개발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지구 내 공원, 광장, 녹지 조성 등의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다음 [표1]와 같이 조경공사를 시행하였다.

【표1】조경공사 현황(1단계) : 생략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따르면 발주청이 선임한 공사감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⁴⁴⁾한 공사감독자의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이하 ‘업무수행지침’

44)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70호)


이라 한다.) 제143조(공정관리), 제144조(공사진도 관리), 제146조(수정 공정계획)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의거하여 소요의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하고, 공정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 공정 중심의 일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감독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감독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공량의 증감, 공법변경과 불가항력에 따른 공사중지, 현장실정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수정목표 종료일이 당초 계약 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천도시공사에서는 2019. 4월 ‘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공구)외 2건’을 착공한 이후, 선행사업⁴⁵⁾ 지장물 이설 지연에 따른 작업공간 부족 등으로 인한 실착공 지연으로 다음 **【표2】**와 같이 약3~12개월 동안 공사 진척이 지속적으로 부진하였음에도, 공사감독자는 「업무수행지침」 제146조의 규정에 따른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수립의 필요성 등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표3】**과 같이 2020. 6월 공정지연 등에 따른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등 공사감독자의 수행업무인 공정관리 등 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2】 조경공사 공정관리현황 : 생략

【표3】 조경공사 계약기간 연장일 : 생략

45)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공구, 공사기간: 2017.1.10.~2021.11.30., 본공사)

조치할 사항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기관경고] 공정지연 방지를 위한 시공사 지도·감독, 공정관리 등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사항으로, 기관차원의 관리가 필요하여 경고하오니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직원에 대한 업무연찬 등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요구

제 목 사업예산의 편성 및 집행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도시공사

관 계 부 서 ◆사업단, ■처

내 용

인천도시공사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20**. **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20**. **월 개발계획 승인 및 20**. **월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20**. **월 ‘■■■■ 택지개발사업(**단계)’을 준공하였으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20**. **월 지구계획 승인을 득하고 20**. **월 ‘▲▲▲▲ 개발사업 단지조성 공사’를 착공하였다.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예산·결산에 관한 공통기준) 및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VI.예산과목 구조 및 과목해소 5. 지출예산과목 성질별 분류 및 과목해소(목·세목)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 등 공사의 기공식 및 준공식에 따른 최소한의 의식을 위한 행사성 경비는 지출예산과목에 맞게 별도의 예산(시설부대비)을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도시공사에서는 [표]와 같이 ‘■■■■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공구)' 준공식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정보고 승인(발주처 지시, 20**. **. **, 설계변경을 통해 도급내역에 반영하였고, '▲▲▲▲ 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 기공식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급내역에 반영하는 등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준공식 및 기공식 도급내역 반영 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인천도시공사장은

[주의] 사업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개선 요구

제 목 설계변경의 기술검토팀(T/F팀) 구성 · 운영 소홀

기 관 명 인천도시공사

관 계 부 서 目부

내 용

인천도시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3(건설사업관리의 실정보고 등),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이하 ‘업무수행지침’ 이라 한다) 제97조(설계변경 관리)의 규정에 의한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팀(T/F팀) 구성이 필요할 경우 공사 내부 지침에 의해 운영 중인 ‘설계변경 심의위원회’⁴⁶⁾를 대신 활용하고 있으며, 심의대상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운영기준 : 생략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3(건설사업관리의 실정보고 등), 「업무수행지침」 제97조(설계변경 관리)에 따르면, 발주청은 설계변경 방침결정 요구를 받은 경우,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를 위하여 발주청의 소속직원으로 기술검토팀(T/F팀)

46)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제정 · 운영(개정 2020.12.30. 지침 제178호)

- 건설공사(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및 조경분야 등)중 계약금액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계약변경 전 타당성과 적법성을 검증하고 적정한 방향 제시

을 구성(필요시 민간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무수행지침」 제97조(설계변경의 관리)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의거 시공방법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 발생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사항으로 「업무수행지침」 제97조 제12항에 의한 기술검토팀(T/F팀) 기술검토 대상에는 「업무수행지침」 제9항, 제10항, 제11항에 의하여 증액사항 뿐만 아니라 감액사항 또한 검토·운영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인천도시공사에서는 「업무수행지침」 제97조(설계변경의 관리)의 규정에 의한 실정보고 등 설계변경 방침결정 요구사항에 따른 기술검토를 위해 기술검토팀(T/F팀) 대신 내부지침에 의한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일정금액 이상의 증액만을 기준하여 운영하고 있어 「업무수행지침」에 따른 기술검토팀(T/F팀)의 업무와 상이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도시공사장은

[개선] 실정보고 등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를 위해 별도의 기술검토팀(T/F팀)을 구성·운영 또는 「업무수행지침」에 따른 기술검토팀(T/F팀)의 업무를 반영한 공사 내부 지침 ‘설계변경검토위원회 운영기준’을 개정·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건축 설계용역(공모) 저작권 귀속업무 소홀

기 관 명 인천도시공사

관 계 부 서 ◇처, ▣처

내 용

1. 판단기준(관계법령)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제1항 제5호에 따라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등은 ‘건축저작물’로 되어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저작권의 귀속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제10절 6호(용역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 가목에서는“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회계처리의 원칙 등)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의8(회계처리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준용 조항과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로,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담당자로, 소속공무원은 소속직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공무원은 직원으로, 관계 공무원은 관계 직원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인천도시공사 「회계규정」 제186조(준용법규)에는 “계약사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예산회계 관련법령,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관련규칙, 「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로 예규 및 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관계사실

인천도시공사에서는 [표]와 같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설계공모를 통하여 선정한 7개 사업에 대하여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설계공모를 통하여 계약한 7개 용역 중 2개를 제외한 5개 사업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10에 따라 계약서 계약내용에 “건축 저작물(성과품)”에 대한 저작권의 인천도시공사(발주처)로 귀속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았다.

【표】 계약내용에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 포함 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시정] ‘■■■■■ 신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5개 사업에 대한 저작권을 관련법에 따라 인천도시공사(발주처)에 귀속하여 주시고, 향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연간 임대계획 및 영구임대주택 관리계획 수립 소홀

기 관 명 인천도시공사

관 계 부 서 ▽처

내 용

1. 판단기준(관계법령)

인천도시공사 「임대규정 시행내규」 제2조의2(연간 임대계획 수립)에서는 “임대부서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연간 임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에는 연간 임대목표량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2조의3(연간 임대계획의 변경) 제1항에서는 “연간 임대계획을 다음 각 호⁴⁷⁾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변경하였을 경우에 해당 부서장은 그 변경 사항을 지체 없이 임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47) 1. 경영목표, 운영계획 및 자료계획을 수정하였을 경우.
2. 사업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하였을 경우.
3. 사업추진 일정의 지연 또는 단축으로 변경이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기타 연간 임대계획을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또한, 인천도시공사 「영구임대주택관리규정」 제3조(관리계획의 수립)에서는 “임대주택관리부서에서는 매년 11월 말까지 익년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며, 인천도시공사 「영구임대주택관리규정 시행내규」 제2조(관리계획 수립의 원칙)제1항에서는 “규정 제3조에 의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월별, 연도별로 구분하여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관계사실

1) 인천도시공사 연간 임대계획 수립 소홀

인천도시공사에서는 임대주택의 건설, 매입, 관리를 [표1]과 같이 각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임대부서(▽처)의 장은 임대주택 건설 계획과 임대주택 매입 그리고 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 통보된 내용 등을 포함하여 매년 1월말까지 연간 임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임대부서(▽처)의 장은 업무분장 내용 중 규정에 따른 연간 임대계획을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하지 않았으며 이에따라 연간 임대계획을 [표2]와 같이 수립하지 않았다.

【표1】 인천도시공사 임대주택 업무 관련 현황 : 생략

2) 인천도시공사 영구임대주택 관리계획 수립 소홀

인천도시공사에서는 2020년~2022년까지 인천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11월 말까지 영구임대주택의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나 [표2]와 같이 영구임대주택 관리계획을 일부 수립하지 않았다.

【표2】 인천도시공사 연간 임대계획 및 영구임대주택 관리계획 수립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주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에 대한 연간 임대계획 및 익년도 영구임대주택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영구임대주택 및 행복주택 실태조사 소홀

기 관 명 인천도시공사

관 계 부 서 ▽처

내 용

1. 판단기준(관계법령)

「인천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및 관리규칙」 제8조(입주자관리) 제1항에서는 “관리주체는 입주자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거주실태를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전대 등 임대주택 법령 위반사항, 임대주택 거주요건 상실, 계약사항에 대한 위반사항, 주민등록법령 위반사항 등이 발견된 때에는 임대차 계약의 해지 등 임대주택법령 및 임대차 계약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

또한, 인천도시공사 「주택관리규정」 제6조(전매·전대방지)에서는 “분양부서의 장은 주택의 전매·전대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주택관리규정 시행내규」 제3조(전매·전대방지) 제2항에서는 “주택관리부서의 장은 전매·전대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기마다 1회씩 입주자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관계사실

인천도시공사에서는 2020년~2023년(상반기)까지 영구임대주택 및 행복주택에 대한 전매·전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입주자 실태조사를 반기마다 1회씩 하여야 하나 [표]와 같이 임대주택 실태조사를 규정에 맞지 않게 실시한 사실이 있다.

【표】 인천도시공사 영구임대주택 및 행복주택 실태조사 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주의] 향후 영구임대주택 및 행복주택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실태조사를 시행 하시어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완료사업 하자검사 시행 소홀

기 관 명 인천도시공사

관 계 부 서 ●센터, ◆사업단

내 용

1. 판단기준(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담보 책임의 존속기간)제1항에서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로 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11절 3. 하자검사. 가. 에서는 “계약담당자는 “1-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관계사실

인천도시공사에서는 하자담보기간이 남아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연 2회의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표]와 같이 ■■■■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공구 미이관 부분) 등 8개 사업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른 하자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완료사업 하자검사 미시행 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주의] 완료사업에 대한 하자검사를 관련법규에 따라 실시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주의 요구

제 목 건설공사(택지조성, 도시시설물) 공사물량 중복 검토 소홀

기 관 명 인천도시공사

관 계 부 서 ◆사업단

내 용

인천도시공사는 ㉠와 공동 사업시행자로 ‘□□□□ 개발사업’을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라 20**.**,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20**.**, 개발계획 승인 및 20**.**,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단계별(*~*단계)로 택지조성공사 및 지구 내 도시시설물 건설공사를 [표1]과 같이 시행하고 있다.

【표1】 단계별 택지조성 및 도시시설물 현황 : 생략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1조(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 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기술인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고,

공사착수전, 공사시행중, 준공 및 인계·인수단계에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를 포함하여 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인천도시공사에서는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검토업무를 소홀히 하여 아래 [표2]와 같이 택지조성공사와 도시시설물 건설공사에 공사물량이 중복해서 반영되어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현재까지 공사비(도급액 및 자재비)가 중복 계상된 현황은 [표3]과 같다.

【표2】 택지조성과 도시시설물 건설공사 공사물량 중복 현황 : 생략

【표3】 택지조성과 도시시설물 건설공사 공사비 중복 계상 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시정] ■■■■■ 개발사업 중 택지조성공사와 도시시설물공사에 중복하여 계상된 공사비(도급액+자재비) 513,338천원에 대하여 설계변경(감액)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향후 업무 추진 시 관련규정에 따라 공사착수 전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를 검토하여 공사비가 중복 계상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주의 요구

제 목 가설건축물 등 공사비 과다 계상

기 관 명 인천도시공사

관 계 부 서 ◆사업단, ■처

내 용

인천도시공사는 ‘■■■■■ 개발사업’, ‘■■■■■ 개발사업’, ‘■■■■■ 개발사업’을 위해 각 사업지구별로 택지조성공사, 도시시설물 건설공사 등을 시행하고 있다.

1. 가설건축물 과다 반영

「건설기술 진흥법」 제45조(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93조(표준품셈의 확정) 및 「2023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623호(2022.12.30.)]에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2장 가설공사에 현장사무소 등의 규모는 아래 [표1]과 같이 해당 공사의 직접노무비를 기준으로 그 규모를 정하고 있다.

【표1】 현장사무소 등의 규모(토목) : 생략

그러나 인천도시공사에서는 아래 [표2]와 같이 일부 사업에서 기준 규모 이상으로 현장사무소를 반영하고, 또한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복리후생시설, 여성감독자휴게실 등을 반영하는 등 가설건축물 비용을 도급액에 과다 반영하였다.

【표2】 현장사무소 등 반영 현황 : 생략

그 중, 진행중인 사업에서 반영된 가설건축물의 규모와 다르게 설치한 사업(상가 임대 포함)과 가설건축물 설치 시기 미도래로 설치하지 않은 사업 중 기준에 맞게 조정이 필요한 현황은 [표3]과 같고, 조정해야할 공사비는 [표4]와 같다.

【표3】 현장사무소 등 조정 현황 : 생략

【표4】 현장사무소 등 공사비 조정 현황 : 생략

2. 기타 부대비용 공사원가 반영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정가격 작성요령 공사원가 계산 방법에 따라 공사원가 체계는 아래 [표5]과 같고

【표5】 공사원가 체계 : 생략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직접경비) 및 [별표2](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및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에 직접경비 산출 및 정산 방법과 각 항목별 지출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또한,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예산·결산에 관한 공통기준) 및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지출예산과목 성질별 분류 및 과목(세목)에 과목(세목)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도시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정가격 작성요령 공사원가 계산 방법에 규정되지 않은 비용(복리시설운영기타비용 등)과 간접노무비에 이미 포함된 비용(청소원 등)을 도급액에 반영하였고,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직접경비) 및 [별표2](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및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에 직접경비 산출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단사무실(감독사무실)에 소요되는 사무기기 등 비품비가 건설사업관리용역 현장주재비로 이미 반영되어 있음에도 감독사무실 비품비로 도급액에 반영하였으며

또한, 감독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공사관리관인 인천도시공사 직원이 사용할 사무기기 등 비품은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예산·결산에 관한 공통기준) 및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지출예산과목에 맞도록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하여야 함에도 도급액에 반영하였고, 그 현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기타 부대비용 도급액 반영 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시정] ① ‘■■■■■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공구)’ 외 4개 사업에 과다 반영된 가설건축물 공사비 162,963천원에 대하여 설계변경(감액) 하시기 바랍니다.

②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도금액에 반영한 ‘■■■■■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공구)’ 외 1개 사업의 기타 부대비용 218,152천원에 대하여 설계변경(감액)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향후 공사업무 추진 시 관련 규정에 맞게 현장사무소 등 가설건축물 규모 반영, 공사 원가 계산에 철저를 기하여 불필요한 비용이 도금액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발주자의 적정 공사 기간 입찰공고 안내 등 소홀

기 관 명 인천도시공사

관 계 부 서 ◎처

내 용

인천도시공사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일정 기간 안내공고를 통한 입찰을 시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찰공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2023. 6. 29.)」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건설진흥기술법」 제45조의2(공사 기간 산정기준) 및 「공공건설공사의 공사 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80호, 2021. 9. 8. 제정)」에 따라 2021. 9. 17. 이후 입찰하는 건설공사⁴⁸⁾는 공사 기간 적정성을 검토하여 입찰 관련 서류에 산출 근거를 제시하도록 발주자의 적정 공사 기간 의무화가 시행되었다.

48)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정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그러나, 인천도시공사에서는 [표]와 같이 ‘○○○○ 설치공사’ 외 4개 사업에 대하여 실시 설계 용역 준공 시 공사 기간 적정성을 검토하지 않고 18개 사업에 대해서는 입찰 관련 서류에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입찰공고를 시행하였다.

【표】 발주자의 적정 공사 기간 산정 검토 여부 : 생략

조치할 사항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주의] 건설공사 발주 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 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공사 기간 적정성을 검토하여 입찰 관련 서류에 산출 근거를 제시하고,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 직무교육을 시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개 선 요 구

제 목 □□□□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공구)감독 소홀

기 관 명 인천도시공사

관 계 부 서 ●처

내 용

인천도시공사에서는 스마트 친환경적 도시네트워크가 구축된 자족형 명품 신도시 조성으로 인천 ㉠㉠㉠ 지역의 발전 및 국민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 택지 개발사업 조경공사(**공구)’를 아래[표1]와 같이 추진하고 있다.

【표1】 공사현황 : 생략

「건설기술 진흥법」 제45조(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실적을 토대로 산정한 공사비 및 표준품셈 등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내용을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 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고, 건설공사 시공 이전에 설계서 등의 적정성 및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보고하는 사항에 대해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착수 단계에서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현장 시공 확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에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건설사업관리·시공·사후 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관리, 설계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천도시공사 재생사업본부 스마트기술처에서는 ‘□□□□ 택지개발 사업 조경공사(**공구)’와 관련하여 야생 수목 이식을 위한 설계대가 작성을 ‘건설공사 표준품셈’⁴⁹⁾이 아닌 인천도시공사 자체기준인 ‘IH 적산기준’⁵⁰⁾을 적용하여 아래 [표2]와 같이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보다 5,500천 원을 과다하게 계상하는 등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2] 수목 이식 내역 적용 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개선] 공사원가내역 작성 시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우선 적용하고 표준품셈 내용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여건 및 최적의 시공 방법을 고려한 자체 적산기준을 마련하고 해마다 달라지는 기준에 대해 갱신하여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49) 건설공사표준품셈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적정하게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공하여 건설프로젝트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여 모든 건설공사에서 표준으로 적용.

50) IH 적산기준은 2013년 표준품셈 개정 전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현재 적용 부적정.

인 천 광 역 시

시정·주의 요구

제 목 ▲▲▲▲ 조성사업 근린공원 제**호 우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공사감독 소홀

기 관 명 인천도시공사

관 계 부 서 ■처

내 용

인천도시공사에서는 ▲▲▲▲ 근린공원(제**호)의 원활한 배수체계 구축을 위한 우수측구 등 배수관 설치로 ‘▲▲▲▲ 조성사업 근린공원 제**호 우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아래 [표1]와 같이 시행하였다.

【표1】 공사현황 : 생략

1. 건설공사 설계 감독업무 소홀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의하면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사감독자의 업무 내용에 따라 그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서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내용을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 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고, 설계서 등의 공사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 시공을 중심으로 해당 건설공사 시공 이전에 적정성 및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규정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공사착수 단계에서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현장 시공 확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천도시공사 ■본부 ■처에서는 ‘▲▲▲▲ 조성사업 근린공원 제**호 우수처리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실시설계시 지장 수목의 이식을 고려하지 않고 주요 공정인 벤치플롭관을 소형장비로 매설하는 것으로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 후 대상지 내 수목 이식을 하지 않고는 소형장비로도 작업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설계변경을 통하여 교목103주, 관목800주를 추가 이식하여 결과적으로 75백만원을 증액하였다. 이는 실시 설계 시 현장 여건을 고려하면 필수적으로 포함 되어져야 할 공정이며 설계검토 미흡 사항으로 인해 올바른 설계라면 당초 설계 금액인 254백만 원이 아닌 3억 원 이상의 설계 금액으로 해당 공사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전문공사 기준⁵¹⁾에 따라 공사 내 사급자재로 적용된 벤치플롭관 및 스틸크레이팅 등은 관급자재 직접구매 대상으로 조달 구매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제1항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호, 2022.6.2.)」 제4조(계상 의무 및 기준)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

51) 전문공사 추정가격 3억 이상 공사에 대해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官給資材)로 설계에 반영하여 직접 구매하여야 한다.

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같은 기준 제7조(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하고 같은 기준 제8조(사용 금액의 감액·반환 등)에 따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 보건 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 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 장비(무전기)는 구입·임대비용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처에서는 ▲▲▲▲ 조성사업 근린공원 제**호 우수처리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무전기를 산업보건안전관리비 항목으로 구입하면서 전체금액을 계상하여 아래 [표]와 같이 부적절하게 정산 준공되었다.

【표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시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사용기준에 맞지 않는 항목에 대해 정산하지 않고 지출된 599천 원을 회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설계서 작성시 공사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 시공을 중심으로 해당 건설공사 시공 이전에 적정성 및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조경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처리 부적정

기 관 명 인천도시공사

관 계 부 서 ○처

내 용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 금액에 반영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제1항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호, 2022.6.2.)」 제4조(계상 의무 및 기준)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같은 기준 제7조(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하고 같은 기준 제8조(사용 금액의 감액·반환 등)에 따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 보건 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 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도시공사에서는 [표]와 같이 ‘■■■■■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공구)’ 외 2개 사업에 대하여 준공검사하며 사용기준에 맞지 않는 항목에 대해 안전보건관리비를 부적정하게 준공 처리하였다.

【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시정] 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사용기준에 맞지 않는 항목에 대해 부적정하게 지출된 1,781천 원을 회수하시기를 바랍니다.

② 건설공사 준공 시 정산이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증빙서류 및 현장 확인 등 정산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시기를 바라며,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 직무교육을 시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 체결시기 미준수

기 관 명 인천도시공사

관 계 부 서 〇처

내 용

인천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〇처에서는 ■■■■ 지역 스마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 인프라와 5대 분야 15종 서비스를 유관 공정과 협업이 가능한 시기에 구축하고자 [표]와 같이 검단 스마트도시 3단계 정보통신공사(**공구, **공구)를 시행하고 있다.

【표】 ■■■■ 정보통신공사(**공구, **공구) 건설공사 현황 : 생략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리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제1항, 제2항에 따라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는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이하 ‘기술지도계약’이라 한다)을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체결해야 한다.

다만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사업주가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회계담당관에서 중·소규모 건설공사 발주 시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직접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22. 8. 18.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설공사 발주자 등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관련 안내를 인천도시공사에 하달한 바 있다.

그러나 ○처에서는 ■■■■ 정보통신공사(**공구, **공구) 착공일(2023. 5. 18.)을 경과하여 2023. 6. 1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재해예방 기술지도계약 체결시기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주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자에 대하여 업무연찬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지침 미준수

기 관 명 인천도시공사

관 계 부 서 ☑처

내 용

인천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처에서는 '**년 **월 매입 후 방치되어 안정성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 부지 내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용역을 시행하여 조속한 해체 및 철거를 추진하고자 [표]와 같이 □□□□ 부지 내 건축물 해체계획서 용역 및 해체 및 철거공사를 시행하였다.

【표】 구(舊) 성보공업부지 내 건축물 해체공사 현황 : 생략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에서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고,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해 현장 작업 시 일체형 작업발판⁵²⁾ 사용을 확대하는 건설추락사고 방지대책을 발표⁵³⁾했다.

52) “일체형 작업발판(이하 “시스템비계”라 한다)”이란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조립형 작업발판으로 고소작업에서 작업자가 작업장소에 접근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가설구조물을 말한다.

53) 국토교통부, 건설노동부 보도자료 “안전 건설환경 조성, 발판부터 튼튼하게 만든다” (2019. 4. 11.)

그리고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에 따른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이하 '추락사고 방지 지침'이라 한다)과 작업허가제⁵⁴⁾ 도입 시기(2020. 4. 1.부터 시행)를 보완 한 보완지침(2020. 3.)을 시행하였다.

따라서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추락사고 방지 지침에 따라 작업 발판(비계)을 설치할 때에는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을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설계 발주단계에서 시스템비계를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을 작성하여야 하고, 시스템비계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설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예정가격에 시스템비계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청은 공사계약을 할 때 건설공사에 사용할 비계 설치비를 시스템비계 설치 기준으로 산정하여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비계구조물 시공상세도의 작성여부를 확인하고 제출된 시공상세도의 구조적인 안전성 등 적정성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발주청은 강관비계로 설계되어 착공 예정이거나, 이미 착공되었지만 강관비계를 아직 설치하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를 변경하여 시스템비계를 적용토록 하고, 시스템비계로 변경함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은 발주청이 부담한다.

그러나 ☐처에서는 ☐☐☐☐ 부지 내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용역과 관

54) 시공자는 2m 이상의 고소작업, 1.5m 이상의 굴착, 가설공사 등 위험공종을 작업하기 전에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작업계획을 제출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은 후 위험공종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받은 작업과 작업조건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을 제출 후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

련하여 추락사고 방지 지침을 인지하지 못하여 과업지시서 작성 시 시스템 비계가 설계에 반영하도록 설계조건을 작성하거나, 설계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등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

또한 강관비계로 설계되어 착공 예정인 경우에는 설계를 변경하여 시스템비계를 적용토록 하여야 하나, 추락사고 방지 지침을 인지하지 못하여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등 추락사고 방지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주의]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설계 발주단계에서부터 시스템비계를 설계에 반영하시기 바라며,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자에 대하여 업무연찬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건설공사 안전관리 규정 미준수

기 관 명 인천도시공사

관 계 부 서 ◇처, ●처, ◆사업단

내 용

인천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관리 운영하는 건물, 시설물, 토지 및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와 환경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시공 대책에 의거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경제적이고 안전하게 인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공사안전관리규정」 (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 내규를 통해 안전관리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1. 안전점검반 구성 미편성 및 교차점검 미시행

「안전관리규정」 제4조(안전점검체계)에 따르면 공사의 안전점검 체계는 소관 업무부서장 안전점검, 공사 현장별 및 자체 안전점검으로 구분하고 공사 안전점검반 편성 시기 및 점검범위는 [표]와 같고, 사업시행부서의 기술직 담당과장 이상 2명 1조로하는 안전점검반을 편성하여 분기별 1회 또는 필요시에 담당사업장을 상호교차 점검하여야 한다.

【표】 공사 안전점검반 편성 시기 및 점검범위 : 생략

그러나 ◇처, ●처, ◆사업단에서는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점검반을 편성하고 운영하여야 하나, [붙임]과 같이 이행현황을 검토한 결과 안전점검반 편성하지 않았으며, 공사 현장별 안전점검반이 분기별 또는 필요시 담당 사업장을 상호교차점검 하여야 하나, 교차점검을 미시행하는 등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2. 안전관리 기본계획 미수립

「안전관리규정」 제5조(안전관리 기본계획) 제1항에 따르면 안전관리 기본계획은 건물 및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⁵⁵⁾ 및 공사현장의 안전에 관한 사항⁵⁶⁾과 해빙기, 강우기, 월동기에 대비한 붕괴, 매몰, 낙반 등 용지의 안전 예방에 관한 사항, 상·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및 기타 중요 공종별 안전에 관한 사항, 해상 및 수중공사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사업 시행부서에서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처, ●처, ◆사업단에서는 공사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사업시행 부서에서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3. 설계안전점검표 및 준공안전일지 미작성

55) 가. 각종 소방설비 및 기구, 안전장치 등의 점검 및 정비
다. 안전한 근무 및 작업환경 조성
마. 안전사고 요인 적출
56) 가. 제1호의 가목 내지 마목의 사항
다. 위험작업 및 설비에 대한 안전점검
마. 각종 중기차량 등의 안전운행 등과 도로정비

나. 각종 시설의 안전유지
라. 소화 및 피난 등 긴급사태에 대처한 훈련
바. 동별 책임자 및 기능별 책임자 선임
나. 도급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 조치사항
라. 보호장구사용 및 소정의 안전표지 부착
바. 현장 안전회의 개최

「안전관리규정」 제6조에 따르면 공사가 관리 또는 시행 중인 시설물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장은 수시로 이를 확인 감독하고, 공사설계도서를 작성할 때는 그 작성 담당 직원은 안전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설계안전점검표)에 의하여 확인 점검하여야 하며, 준공검사를 관장하는 안전관리부서의 장은 준공검사자에게 안전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준공안전일지)에 의하여 확인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처, ●처, ◆사업단에서는 [붙임]과 같이 ‘▣▣▣▣▣ 주택건설사업(****)’ 외 23건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설계 시 점검해야 할 별지 1호 서식인 ‘설계안전점검표’를 작성하지 않았다.

또한 ◇처, ●처, ◆사업단에서는 [붙임]과 같이 ‘▣▣▣▣▣ 주택건설사업(****)’ 외 4건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규정」 별지 2호 서식인 ‘준공안전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주의] 「건설공사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자에 대하여 업무연찬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사 안전관리규정 이행 현황 : 생략